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

- 주요 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 -

일 시 _ 2013. 3. 7(목) 오후 2시

장 소 _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최 _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_  국민건강보험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불법수급자가 없는지,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에의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 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 차

1. 프로그램 (식순)	1
2. 인 사 말	3
3. 축 사	
차흥봉 회장	5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 보건복지부 장관/ 본 연구회 고문)	
김성호 행복세상 이사장	6
(전 법무부장관)	
김영래 총장	7
(동덕여자대학교 / 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오제세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장)	
4. 주제발표	
허준수 교수	9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5. 토 론 자	
1) 김동열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수석연구위원) ...	39
2) 정은상 님 (일반시민패널공모선정)	49
3) 김재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7
4) 현진권 소장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59
5) 김명훈 박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장)	63
6) 신성식 (중앙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67
6. 부 록 : 본 연구회 연혁 / 구성원 / 관련 언론 기사	77

프로그램

1부 사 회: 도 미 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1) 개회선언
- 2) 국민의례
- 3) 인사말씀 이정숙 회장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4) 참석자 소개 사회자
- 5) 축 사 :

차흥봉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전 보건복지부 장관 / 본 연구회 고문)

김성호 행복세상 이사장 (전 법무부장관)

김영래 총장 (동덕여자대학교 / 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오제세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장)

- 6) 축시 낭송

정윤경 (말샘글샘언어교육연구소 대표/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사 회: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 1) 주제발표 : 허 준 수 교수(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경실련사회복지위원장)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

-주요 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

- 2) 토론자

- 1) 김동열 실장(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수석연구위원) 39
- 2) 정은상 님(일반시민패널공모선정) 49
- 3) 김재진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7
- 4) 현진권 소장(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59
- 5) 김명훈 박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장) 63
- 6) 신성식 중앙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67

- 3) 참관자 질의/ 응답

- 4) 총마무리 발언 : 허준수 교수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그제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긴 동면에서 깨어나는 경칩이었습니다. 이제 날마다 기온이 상승하여 봄이 성큼 성큼 다가 올 것입니다. 지난 겨울은 몇 십만의 한파로 정말 춥다는 소리를 많이 하여서 봄이 쉽게 오지 않았을 것 같았지만 자연의 시계는 어김없이 돌아가 때가 되니 동장군도 물러나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케 하는 봄의 힘찬 기운이 공사다망한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사)선진복지연구회가 창립한지 햇수로 4년이 되었는데 돌이켜 보니 기적만 같고 너무 감사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토론회 때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 하셔서 참석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격려와 고견, 충고가 계시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회는 우리나라가 선진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되고 우리의 참여가 필요함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을 아무리 늘리고 좋은 제도, 정책을 많이 만든다고 해도 국민, 시민들이 무관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낭비가 되고 실패하여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민, 시민들이 행복 해 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시민들의 참여는 복지예산의 누수나 중복과 오용을 막을 수 있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전달체계가 이루어져 복지사각지대가 없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때에 전달되어 삶의 질이 향상 되어 질 것입니다.

이제 새 정부가 일을 시작 하였습니다. 78%의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애주기별맞춤형 복지 실현에 대해 기대가 매우 큼니다.

‘박근혜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고 국민이 행복한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 국제 주변정체의 안정, 국제경기 회복 등이 필요하며 또 국내적으로 사회 대통합과 여, 야 정치권의 합리적인 운영 등이 뒷받침이 되어야 순항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없는 여건 속에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5대 국정목표와 21대 추진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전지원, 저출산극복과 여성 경제 활동 확대 등 4대 추진전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본 연구회 주최 토론회에서는 몇 분의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과 제언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이 성공하는데 일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제 발표를 해 주시는 허준수 교수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신성식 기자님, 정은상님, 김동열 실장님, 김명훈 박사님, 김재진 박사님, 현진권 소장님 토론회 함께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쁜 일정 중에서도 축사와 격려를 위해 귀한 발걸음 해 주신 차홍봉 회장님, 김성호 이사장님, 김영래 총장님, 오제세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듭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항상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3. 7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이정숙

축 사

차 홍 봉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사단법인 허가 및 창립 3주년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계사년 새해는 그 어느 해보다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복지국가의 시대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큼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단법인으로 거듭난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희망찬 출발을 했으면 합니다.

지난 20세기를 돌이켜보면, 우리 국민은 일제강점과 광복, 남북분단과 전쟁 등 고난과 격동의 역사 속에서 ‘빈곤과 질병의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에 들어 우리 국민의 화합과 “하면 된다”는 민족적 저력을 바탕으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켜 세계적으로 잘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사회복지도 상당히 발전하여 선진복지국가로 들어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획기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현주소는 이제 겨우 외형적인 틀을 갖춘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동안 발전시켜온 복지정책의 틀을 완성하고 복지국가의 목표를 충실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전문가적 진단과 정책적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1970년대 이후 유럽제국은 복지국가의 위기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복지정책의 개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국가가 개입하여 지나친 국민 복지를 추구하다가 정부재정적자와 경제성장 둔화 등 부작용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값진 경험을 교훈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복지가 균형 발전하는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복지국가의 전형은 사회복지의 본질인 인간 사랑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념적 지향은 개인의 자유, 경쟁과 부의 축적을 기본으로 하되, 동시에 인간사랑과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모든 국민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책임과 국가책임의 조화가 기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와 같은 복지국가정책으로 중산층이 두터운 원형복지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해온 복지사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회가 지난 20세기 빈곤과 질병의 시대를 넘어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21세기 선진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거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김 성 호 이사장 (재단법인 행복세상/ 전 법무부 장관)

선진복지사회연구회의 사단법인 허가와 창립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창립 3주년을 맞이하여 개최한 이번 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원합니다.

신자유주의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여러 사회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빈부의 격차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젊은이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 발전하는데, 개인의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불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1년 UN이 발표한 국가별 행복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50개국 가운데 고작 56위에 불과합니다. 자살율은 OECD국가 중 2004년 이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통계가 식상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새 정부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밝히며 출범하였을 것입니다. 미 제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스는 “인간의 생명과 행복의 보살핌이야말로 좋은 정부가 가져야 할 최우선적이고 유일하게 합법적인 존립목적”이라 하였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가장 직접적인 부분이 바로 ‘복지’일 것입니다.

최근 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들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복지정책은 다음과 같은 명확한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가 최우선입니다. 모든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능력, 극도의 빈곤상태 등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지 않고,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자칫 부자가 가난한 자의 몫을 빼앗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복지여야 합니다. 당장 늘어나는 복지 혜택은 달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와 관련해 어떤 정책이 일단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리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복지에 들어갈 재원을 확보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 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복지정책 확대는 국가 재정의 파탄과 국가몰락을 불러 올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일부 정치인들 한 때 ‘무상’이라는 단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며, 복지를 정책이 아닌 정쟁의 우선 순위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무상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아르헨티나, 그리스의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여 권력을 쟁취하려는 포퓰리즘은 복지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 가장 주의해야 할 독소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으나, 요즘처럼 ‘복지’에 대한 논의가 이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진 적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논의가 활발해진 만큼,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수 있다면 ‘제대로 된 복지 국가’를 세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큰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선진복지사회연구회의 사단법인 허가와 창립 3주년을 축하합니다.

축 사

선진복지사회는 시대정신의 반영

김영래 동덕여대 총장(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우선 선진복지사회연구회의 창립 3주년과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대선복지 공약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화두의 하나는 복지라는 용어입니다. 이는 사회구성원이 그 만큼 복지라는 개념에 관심이 많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복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또한 복지가 한국사회발전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이제 세계가 부러워 할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하였습니다.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룬 국가입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국으로 독립한 국가들은 아직도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수원 국가에 머무르고 있으나, 한국만이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후진국에게 원조를 주는 공여국가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증명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민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사회이든 그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있는데, 우리는 이를 시대정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진복지사회의 추구는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신생국가로부터 출발하여 산업화 과정을 거쳐 민주화된 한국사회는 이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진복지사회의 구현이 시대정신이 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열망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금년도 국가 예산 중 약 30%인 102조6천억원이 복지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은 정부도 한국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하여 복지정책을 우선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정책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선거 시 정치권에 의하여 일시적인 인기 영합적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서는 안 되며, 지속가능한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선진복지사회연구회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 맞춰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전략이라는 주제로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을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전략에 대한 토

론회를 통하여 제시된 복지정책에 대한 바람직한 각종 전략과 대안들이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수립에 반아드러지어 국민이 행복한 선진복지국가가 실현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선진복지사회의 실현이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 꾸준히 연구를 함은 물론 바람직한 정책 대안 제시에 노력하시는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과 회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동시에 주제발표를 하여 주시는 허준수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제 발 표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

－ 주요 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 －

허 준 수 교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경실련사회복지위원장)

I. 서론: MB정부의 복지정책과 새 정부의 대선 복지공약에 대한 총평

새 정부의 복지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기 이전에 MB정부의 복지정책들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들을 간략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에서 분배보다는 경제성장에 보다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집권 초기부터 임기 말까지 국민의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혁신적인 개혁이나 확충에는 초점을 두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MB정부에서의 시행한 사회복지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의 제도적 개선이나 선진화 방안보다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그 당시의 현안 문제들에 대한 임기응변식 조치를 취하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다. 이로 인하여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제도의 제도화보다는 분절화가 보다 가속되었다. 전반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들은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개선 없이 유지하거나 일부 영역은 대폭 축소하는 방안들을 견지해 왔다. 이러한 결과 MB정부 후반부에 시행된 각종 정책평가들에서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들은 하위수준이나 심한 경우에는 낙제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서 아동보육의 경우 현 정부가 정책을 주도하기보다는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무상보육을 핵심적 공약으로 제안하자 이에 대한 미봉적 대응 방안으로 체계적인 정책적 방향 설정과 구체적 재원마련 방안의 수립 없이, 단기간에 5세 미만에 대한 무상보육정책을 시행한다고 각종 정책과 방안들을 양산했다. 그 결과 아동보육의 핵심인 대한 가정과 부모의 아동보육에 대한 선택권을 고려하지 않고, 영유아 보육시설에 자녀들을 보내는 경우에 한하여 보육비의 일부를 경감하거나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여서 진정한 의미에서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보육과는 거리가 멀고 가정에서 보육이 가능한 영유아들을 보육시설에 맡기게 되는 기현상들이 촉발하게 되었다. 아동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선택권, 급여수준, 경제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등을 면밀하게 고민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건강보험의 경우 부분적인 개선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편이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09년에 비교하여 2010년에는 오히려 1.3%가 하락한 62.7%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급성질환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중증질환이나 만성질환에 대한 가족의 부담은 매우 높고, 그 결과 가족의 구성원이 만성질환, 중병 혹은 희귀성 난치병이 있을 경우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비급여 항목이 많은 현행의 건강보험 체계 때문에 가족의 빈곤화를 더욱 더 촉발시키는 경우가 매우 많다. 또한 일부지역이기는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의료법인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참여정부와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점이 없고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정부재정지원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공공부조와의 연계성을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부실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외형상 복지지출은 참여정부에 비해서 증가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빈곤계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과 프로그램들은 오히려 참여정부 때보다 축소되거나 폐지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신봉하여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점증하는 빈곤계층과 신빈곤 계층을 위한 효과적인 복지정책의 도입과 이에 따른 제도 개선에 매우 미흡하여 국가의 부는 축적되지만 정작 일반 국민들의 삶은 과거에 비하여 더욱 더 열악해 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5년간의 MB정부에서는 경제성장을 통하여 축적되는 국가의 부와 자산을 복지정책을 통하여 분배정책에는 미흡한 측면이 많았다.

제18대 대선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은 다양한 복지공약들을 발표하였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복지정책 공약에 대한 총평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보육, 교육, 의료, 기초연금 및 일자리 등에 대한 복지관련 공약을 분석해 보면 복지 외의 다른 영역의 공약들보다는 방향, 목적 및 재원방안 등이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리고 ‘무상보육’으로 잘못 표현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비 지원’과 ‘반값등록금’으로 알고 있는 ‘대학 등록금 경감방안’ 등은 야당의 대선공약과 기본 방향성에 있어서 일치하는 측면이 높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경우 새누리당은 4대 중증질환에 만 한하여 본인 부담금 경감 또는 면제를 강조하였고,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경우 모든 질환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설정을 공약으로 제안하여 각 당의 건강보험에 대한 입장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을 나타났다.

여당에서 제안한 기초연금¹⁾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노인들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일정금액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야당이 제안한 예산보다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국민연금과의 연계성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당이 제안한 기초연금은 야당이 제안한 현행 소득수준 70%이하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급여를 두 배로 증액하자는 제안보다는 진보적인 성향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의 다층체계의 구축의 측면에서는 여당이 제안한 기초연금의 제도화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심도 깊게 논의해 보아야 할 정책 과제이다.

북유럽 국가의 시사점은 세계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남유럽국가들에 비하여 사회경제적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해 오고 있다. 이는 그동안 북유럽 국가들이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60년대 전쟁후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왔고 그 밑바탕에는 다소 국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더라도 복지확대를 포함한 사회개발보다는 경제개발이 우선시되는 정치사회적 환경에 매우 익숙해져 왔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지난 정부들에서 국민들을 위한 복지제도 확충에 대한 반대 논리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었다. 그리고 국민이나 정치인들은 경제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사회개발이나 복지국가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선진 복지국가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어떠한 국가도 투명한 조세정책과 합리적인 사회보장체계가 없이는 결코 국민들에게 경제개발의 성장분배에 대한 공평한 분배가 자연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1) 국민행복연금(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최우선의 국가 목표로 설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5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지만, 그러나 2000년 이후로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문제는 가속화되고 있고 미흡한 사회보장체제로 인하여 실업, 질병, 산재, 퇴직 등의 사회적 위험들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정망이 선진복지국가들과 비교하여 매우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및 지출 관련 통계지수들은 국력이나 경제력관련 통계지수에 비하여 항상 OECD국가들 중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걸맞은 복지제도의 확충이 오히려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용의 90%가 창출되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고용을 동반하지 않는 IT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활황 등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향상되고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적어서 구조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경제적 부의 증가에 상관없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선진 복지국가인 북유럽국가들은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을 동시에 추구했고 국가의 경제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체계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을 통하여 비록 실직하더라도 구직정보, 직업훈련, 이직훈련 등을 통하여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활성화시켰고, 그리고 재취업할 때 까지 실직자와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적절한 사회보장을 제공하여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매우 효과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다.

전반적으로 새 정부의 대선 복지공약은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정치적 이념과는 무관하게 일부 정책들은 개혁적인 경향을 나타냈고, 그리고 일부 정책들은 야당보다도 진보적인 이념을 내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선 복지공약들에서 여당의 정치적 지향점과 일치하는 정책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소속 정당의 정치적 이념, 명확한 비전, 투명한 정책결정 과정 및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5년 동안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사회적 환경을 보다 진일보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복지관련 대선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II. 국제통계를 통한 우리나라의 현실

1. 2009-2010년 OECD 통계 및 세계 195개국 국가비교

- 1) 인구 10%가 국가 전체 부의 74% 점유
- 2) 인구 10%가 사유지 86% 독점
- 3) 소득불평등 OECD 2위 (1위 미국, 3위 멕시코)
- 4)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비율 7% (OECD 34위, 멕시코 35위)

- 5) 백만장자 증가율/빈부 격차율 세계1위
- 6) 1가구 당 평균 부채 약5,200만원
- 7) 지하경제 GDP의 27.5%
- 8) 빈곤율 20.9% OECD 1위 (OECD평균: 10.6%)
- 9) 전체 빈곤층 약 900만 명
- 10) 기초생활수급자 160만 명
- 11) 최저임금대상자 약 234만 명 (86만4천원/월)
- 12) 신빈곤층 382만명
- 13) 전기/가스 차단 130만 가구(에너지 빈곤층)
- 14) 상대빈곤율 18%
- 15) 최저생계비 OECD 꼴찌
- 16) 최저생계비 이하 750만명 (농어민 제외)
- 17) 월 100만원 이하 노동자 비율 38%
- 18) 빈곤층 1,200만 명 (4인 가족 월 150만원 이하 750만명)
- 19) 노동시간 OECD 1위 (2위 칠레, 3위 러시아)
- 20) 산재사망율 OECD 1위
- 21) 저임금노동자 비율 OECD 1위
- 22) 빈부격차 불만지수 OECD 1위
- 23) 성별 임금격차 OECD 1위
- 24) 실업률 22% (OECD 계산법)
- 25) 비정규직 노동자 900만명 (전체노동자의 50%)
- 26) 임시직 노동자 비율 OECD 2위
- 27) 생계형 알바 300만명
- 28) 청년(15-24세) 실업 450만명
- 29) 육아지원 재정부담 비율 OECD 꼴찌
- 30) 생활 만족도 OECD 꼴찌
- 31) 자살사망율 OECD 1위(24.7명/인구10만명당, OECD 평균: 11.1명)
- 32) 자살자 17,000명/년 (하루 평균 47명, 대부분 생활고 비판)
- 33) 교통사고사망율 OECD 3위(16.1명/인구10만명당, 멕시코 1위: 18명)
- 34) 정신질환자 273만명
- 35) 신체장애자 215만명 (대부분 후천적 교통/산재 사고)
- 36) 알콜 중독자 48만명(여성 60만명)
- 37) 노숙자 12,000명 (서울 4000이상)
- 38) 절대빈곤 청소년(18세 이하) 100만명
- 40) 결식아동 120만명
- 41) 가출 청소년 50만명
- 42) 방학중 결식 초등생 62만명

- 43) 평소 결식 중고생 20만명
- 44) 수업료 못내는 고교생 37,000명
- 45) 국민 1인당 의료비 \$1,688 OECD 24위 (OECD평균: \$2,984)
- 46) 국가의료비 비율(국민의료비/GDP) 6.8% OECD 26위 (OECD평균: 8.9%)
- 47) 인구 1000명당 의사수 1.7명 OECD 29위 (OECD평균 3.1명)
- 48) 암사망율 242명 OECD 5위 (인구 10만명당, OECD평균: 212명)
- 49) 뇌졸중사망자 남 97명, 여 64명(OECD평균 남 60, 여 48명)
- 50) 폐암사망율 65명 (인구 10만명당, OECD평균: 55명)

2. 국가별 행복지수



나라별 행복지수 순위

영국 신경경제학재단 (NEF 2006)	영국 레스터 대학 (2006)
1 바누아투	1 덴마크
2 콜롬비아	2 스위스
3 코스타리카	3 오스트리아
4 도미니카	4 아이슬란드
5 파나마	5 바하마
6 쿠바	6 핀란드
7 온두라스	7 스웨덴
8 과테말라	8 부탄
9 엘살바도르	9 브루나이
10 세인트빈센트그 레나딘	10 캐나다
:	:
102 한국	102 한국
삶의 만족도, 평균 수명, 생존에 필요 한 면적과 에너지 소비량 등을 바탕으 로 계산	건강상태, GDP, 평균수명, 교육 여건 등을 바탕으 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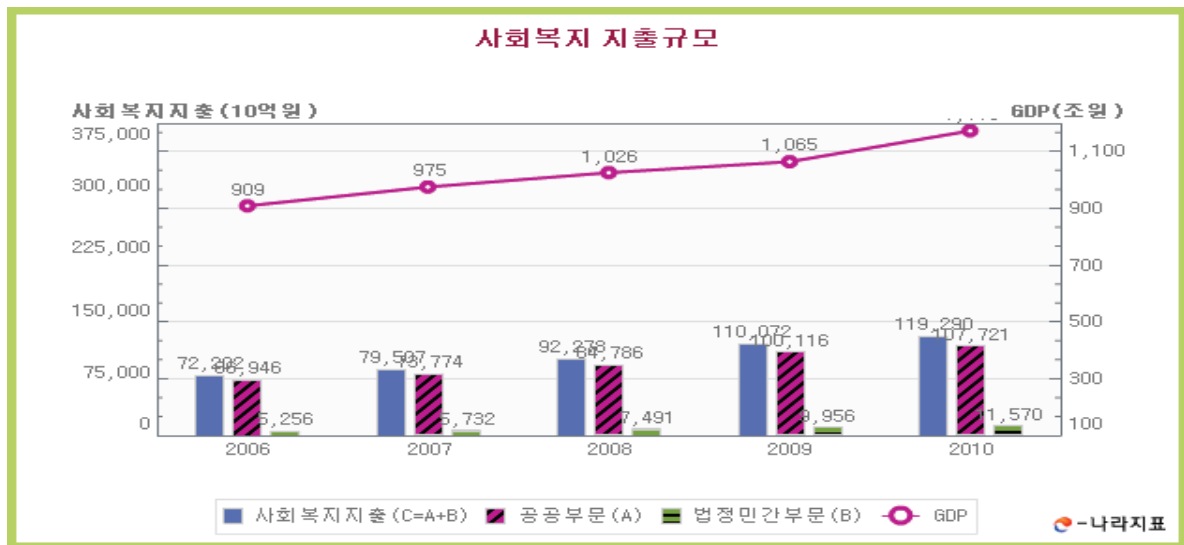
III. 우리나라의 복지지출과 복지수준: OECD 국가별 통계를 중심으로

1. 사회복지지출 규모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은 사회적 위험(노령, 질병, 실업, 재해 등)에 직면한 개인에 대한 공적제도에 의한 사회적 급여(현금, 재화나 서비스)나 재정적 지원을 말하고, 사회복지지출은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민간사회복지지출로 구분된다. 사회복지지출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형태(현금, 현물), 제도부문별(공공, 민간) 등의 구조와 변화추이 등을 파악함으로써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및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통계청, 2013).

OECD 작성기준의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2010년 약 119조원으로 추계되었으며²⁾, 이는 경상 GDP 대비 10.17% 수준이다. GDP대비 1990년 3.13%에서 2010년 10.17%로 향상되었는데 이 결과는 2000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확충 등 사회안전망의 기본 틀 구축으로 국민복지 수준 향상되었다. GDP 대비 공공부문지출은 1990년에 5.4조원(GDP 2.82%)에서 2010년에 107.7조원(GDP 9.18%)로 증대되었다(통계청 나라통계, 2013).

2) 새정부에서는 135조원으로 추계하고 있음(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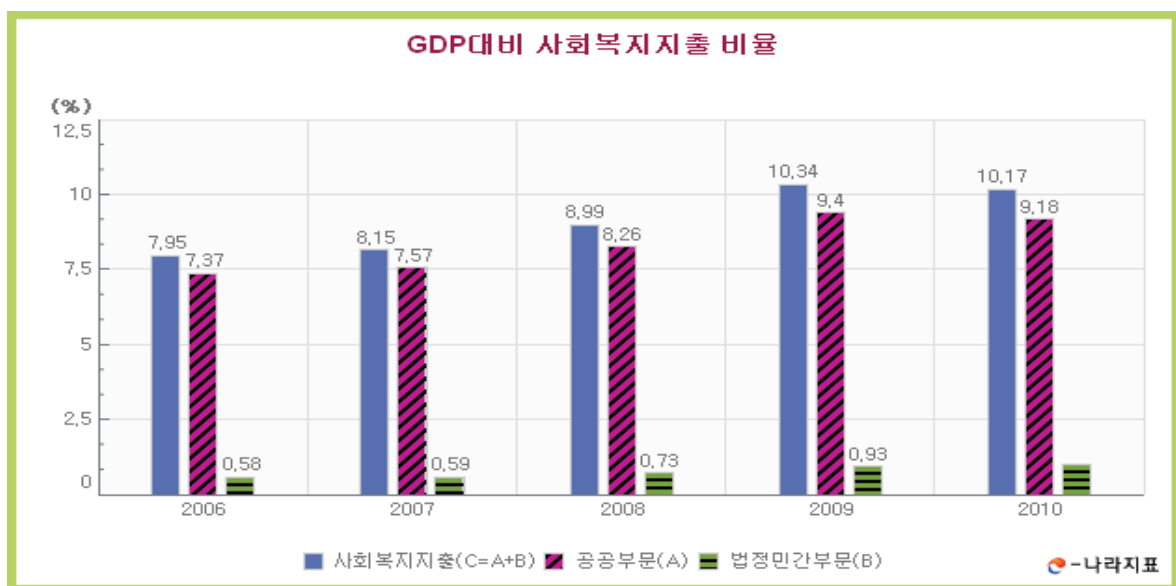


<표> 사회복지지출규모 및 국민1인당복지비용

(단위:10억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GDP(조원)	767	827	865	909	975	1,026	1,065	1,173
사회복지지출(C=A+B)	45,499	54,730	60,740	72,202	79,507	92,278	110,072	119,290
공공부문(A)	41,158	49,784	55,786	66,946	73,774	84,786	100,116	107,721
법정민간부문(B)	4,341	4,946	4,954	5,256	5,732	7,491	9,956	11,570
국민1인당 복지비용(천원)	950,695	1,139,289	1,261,785	1,492,633	1,636,005	1,885,178	2,284,505	2,414,298

(출처:OECD(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12, Oct2012),보건복지부 『한국의사회복지지출』, e-나라지표)



<표> 사회복지지출 규모 및 국민1인당 복지비용

(단위:10억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사회복지지출 (C=A+B)	5.93	6.62	7.02	7.95	8.15	8.99	10.34	10.17
공공부문(A)	5.37	6.02	6.45	7.37	7.57	8.26	9.4	9.18
법정민간부문 (B)	0.57	0.6	0.57	0.58	0.59	0.73	0.93	0.99

(출처:OECD(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12,Oct2012),보건복지부 『한국의사회복지지출』, e-나라지표)

2. 우리나라와 OECD국가들의 복지지출 국제비교

2010년에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주요 OECD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경상 GDP 대비 10.2%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9.2%의 50%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국민 부담률이나 인구고령화 수준은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상태이며, 복지국가유형의 차이 등을 단순비교는 우리나라의 복지위상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등 상대적 위상을 파악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지출의 적정 수준에 대한 평가는 각 국가들의 경제 상황의 고려와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복지지출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이 매우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제도의 성숙도, 고령화 정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결과 2007년 현재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9.2%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인 10.2%에 불과하다(통계청 나라통계, 2013).

2009년 기준 GDP 대비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9.4%로 나타났다. 이는 30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8.2%)에 이어 두 번째로 낮게 지출하고 있다. 복지지출 1위 국가는 32.1%인 프랑스였고 뒤를 30.2%로 덴마크가 잇고 있다. 복지재정 분배를 살펴보면 OECD 국가는 노령(33.5%), 보건(30.2%), 장애(11.1%), 가족(10.1%), 유족(5%) 순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보건(46.5%), 노령(21.4%), 장애(7.3%), 가족(6.1%), 실업(3.3%) 순으로 나타났다. OECD국가는 33.5%를 노령 인구를 위해 재정을 분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1.4%에 그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의 규모 및 수준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퍼주기식 복지”는 지양해야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나 수준을 반영하지 않아서 논리적인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 새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환경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사회복지지출 수준에 합당하게 현재의 사회복지지출의 규모와 수준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의 수준의 미흡함은 인정하고 앞으로의 복지지출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시행하여서 국민들의 사회적 위험이나 빈곤층 그리고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때에 복지국가를 근간으로 하는 진정한 국민 행복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 2007년 OECD 주요국 사회복지지출 규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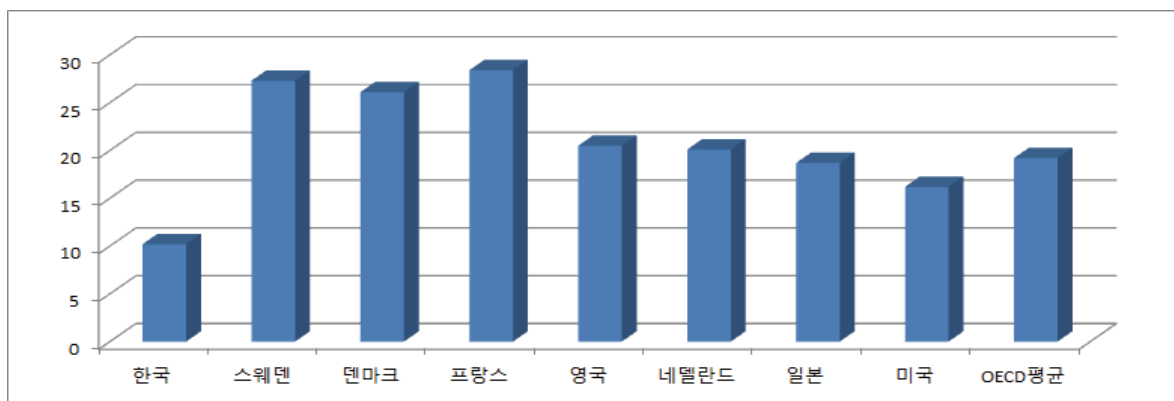
(단위 : 경상 GDP 대비 %)

한국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영국	네델란드	일본	미국	OECD평균
10.2	27.3	26.1	28.4	20.5	20.1	18.7	16.2	19.2

출처 : OECD(www.oecd.org) * 2012년 현재 2007년이 최신 OECD통계임.

<그림> 2007년 OECD 주요국 사회복지지출 규모 비교

(단위 : 경상 GDP 대비 %)



IV. 대선 복지공약의 주요 분야별 분석 및 대안

1.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대상 확대 및 급여지급 방식 개선³⁾

1) 현황 및 문제점

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 증가

2000년 빈곤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보호제도를 개선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저소득 실직자 등 최저생계비 이하의 많은 국민들이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009년 말까지 2년 동안 절대 빈곤층이 50만 명이나 증가했는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포함된 인원은 4%인 2만 명에 불과함. 2006년 170만 명 정도였던 차상위 계층이 2010년에는 14만 명이나 증가하여 180만 명을 초과했다.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55만 명(87만 9천 가구)으로 전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

3)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의 구축(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안).

은 단지 3.1%이다. 수급자의 종류별로 보면 일반수급자가 94.1%이며, 시설수급자는 5.9%이다. 특히 수급자 선정기준이 엄격하여 최저생계비 기준을 조금만 초과 할 경우에 수급자에서 탈락함. 이런 이유로 수급자에서 배제된 빈곤층은 약 410만 명으로 추산된다.

② 급여지급방식 개선의 필요성

본 제도의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등으로 수급자가 될 경우 모든 급여를 제공받지만 수급자에서 탈락될 경우 어떠한 급여도 받을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생계, 주거, 자활, 교육, 해산, 장제, 의료 급여 등이 수급자에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음.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143만9413원) 이하 4인 가구라면 매달 118만8496원의 현금 급여 외에 학교 수업료와 병원 진료비를 지원받는다. 현재 현금으로 받는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포함. 여기에 현물로 받는 교육급여와 의료급여가 연동된다.

○ 개선 방향

(1)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위하여 대상자 확대

경제적 위기 상황에 있는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최저생계비 기준의 완화를 통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본 제도의 수급자로 확대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사각지대 빈곤층을 양산하는 가장 큰 요인인 본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2) 개인별 및 가구별 욕구에 부합하는 개별급여의 도입 필요성⁴⁾

빈곤층의 개인별 및 가구별 욕구에 부합하도록 현행의 통합급여 제공방식을 개별급여 지급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빈곤층 욕구를 면밀하게 사정하여 기존의 급여제도들중에서 개인별 혹은 가구별 욕구들에 부합하는 급여들만을 개별 급여화 하여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계급여, 질병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무주택자들에게는 주거급여,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생계급여와 몇 가지 필요한 급여들을 개인별 및 가구별 욕구에 따라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현재 통합급여체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제로 전환하려고 함(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안).

2. 고령사회 대책⁵⁾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불과 13년 후인 2026년에는 65세 이상인 노인인구가 천만 명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진국 경제수준에서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그래서 참여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대책본부를 신설하여 저출산과 고령화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중점기관으로 운영되었다가 MB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대책본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였다.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을 살펴보면 저출산고령사회대책본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보다는 보건복지부가 중점기관의 역할만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고령화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행정부서 혹은 통합기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집중적으로 제반의 고령사회정책을 총괄 운영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한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심각한 고령화의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아니다.

국가적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노인복지청과 국립노화연구소의 신설 그리고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또한 1차 베이비부머⁶⁾들이 노동시장에서 퇴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 정부에서는 정년연장제도 확립, 임금피크제 도입, 퇴직준비프로그램의 제도화, 기업복지제도의 확충 및 중장년 및 고령근로자들을 위한 직업훈련체계 개선, 고령자차별금지, 일자리나누기운동, 고령친화기업, 사회적일자리, 직장시니어클럽 및 사회적 기업 등의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중장년계층 근로자들이 사회에서 배제되는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고 인생 100세 시대에 부응하는 국가차원의 고령화관련 복지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아가 세계최고의 고령화 속도에 대비하고 장수가 우리사회의 재앙이 아닌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국민, 복지기관, 종교기관, 시민단체, 기업, 지자체 및 정부들이 각각의 역할을 다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령화의 파고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노인일자리정책

새누리당의 대선복지공약의 일자리정책을 살펴보면 여당의 정치적 이념에 부합하는 획기적인 신규고용을 증대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좋은 일자리 증대방안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일부 정책은 진보성향의 야당의 공약보단 더 진보적이고, 그리고 일부 일자리 정책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노동계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의문시 될 정도로 전체적인 일자리정책의 명확한 정책 이념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명박 정부에서 내걸었던 일자리정책들과 중복되고 정확하게 어떠한 산업분야에서

5)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보장(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안).

6) 1955년부터 1963년 생으로 지금부터 15년간 약 700만 명이 퇴직할 예정임.

어느 정도의 신규 고용을 어느 정도의 재원으로 신규 고용을 창출 하겠다는 정책제안이 경제성장을 중요시하는 여당의 입장과도 괴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정부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공헌형, 시장진입형, 시장 자립형 사업을 매년 확대 하여 연간 22만개 이상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본 공약은 이미 현 정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수치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리고 시간근로제형태의 사회봉사활동 및 급여 받는 직종의 개발과 도입에 대한 공약은 자칫 공공성, 자발성, 무보상성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크게 훼손할 수 도 있어서 공약의 개혁성과 적실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생활에 필요한 사회적일자리 직종과 개발과 도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일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우리나라 문화와 관련된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예, 문화재 해설사, 문화예절지도사 등).

그리고 맞춤형으로 통합적인 구직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공약의 구체성은 매우 미흡하고 이미 고용안정센터와 고령자취업알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령자 및 노인들에 대한 구직관련 서비스의 통합 및 전달체계 구축과 이에 대한 재원의 확대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연령기준의 상향조정의 신중한 검토는 일부 타당하나 노인연령기준의 상향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및 사회보험 등에 대한 개편작업에 대한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부분적인 개선만을 언급했지만, 그러나 중고령자 및 노인들을 위한 노동시장에서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약은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노인들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공익형, 교육·복지형, 시장 참여형 등)을 시작하였고 2011년에는 200,000개 노인일 자리를 창출하였다. 특히 사회적 일 자 리의 하나인 노인일자리사업이 노동시장 밖(Out-side of Labor Market)의 Public Work(공공근로)형태의 지원고용프로그램인데 이를 노동시장 내(In-side of Labor Market)의 좋은(decent)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향은 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이 확대된다고 해서 노동시장내의 노인고용과 취업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에서는 고령근로자를 포함하여 노인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시장과 노동시장 밖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

4. 건강보험⁷⁾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보장성은 OECD국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선진국에 비하여 보장률은 62.7%로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부담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2012년의 OECD국민의료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에서 공적재원이 차지

7)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성 제고,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안)

하는 비중은 2010년에 58.2% 정도였다. 이 결과는 OECD국가들의 평균보다도 14%정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부담·저급여의 체제로 비슷한 건강보험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과 비교해 보면 법정본인부담률이 무려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여 보장률은 높이는 것은 국민들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정부의 책임을 경감시켜주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건강보험의 재정이 부족할 경우 보험료를 올려서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정부의 부담률을 선진외국의 수준으로 상승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율이 높고 암이나 만성질환 같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취약하여 이를 보충하려는 차원에서 국민들의 민간실손보험의 가입률이 외국에 비하여 지나치게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한다. 비정상적인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증질환 중심의 건강보험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이 취약할 때마나 유리 지갑 같은 직장인들의 보험 부담률은 상승시키는 쉬운 방안을 선택하기보다는 소득과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및 고소득자들에 건강보험의 부담률의 적정화 작업이 필요하다.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 확보측면에서도 국민의 정부부터 시행되었지만 국민들의 저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자영업자 소득과악위원회의 역할을 정상화하여 우리나라 모든 계층에게 정확한 소득과악을 통하여 적정한 조세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 투명한 조세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사회보장재원의 마련을 위하여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5.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방안

2008년 기초노령연금의 시행 이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른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처음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이 논의된 것은 국민연금 미적용 계층에 대한 확대방안의 하나로서 1997년 국민연금제도개선 기획단을 운영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 세계은행(World Bank),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의 일부로서 국민연금 미적용 대상을 위한 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이후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국가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자녀부양을 위하여 많은 노력은 했지만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공적연금의 미성숙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2008년 현재 65세 이상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수급률이 25%에 지나지 않고 있다. 또한 2008년에 65세 이상 노인들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자는 총 382,050명으로 전체 수급자들 중에서 노인들의 수급률은 7.6%에 지나지 않는다(통계청, 2009). 그리고 경제적 소득이 없는 부모님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정도의 급여를 지급하여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출발했으며, 그리고 2008년 7월부터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확대되어서 실시되고 있다.

2009년 현재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의 예산은 국비 1조 5,908억 원, 지방비 6,520억 원으로 총 2조 2,428억 원 규모이다. 국고와 지방비 비중은 “71:29”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초 지자체의 노인인구비율 및 재정 자주도를 감안한 국고 차등보조율을 반영했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국고 보조율(78.4%)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2009년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70%까지 급여를 지급하여 지자체 지방비 대응부담을 포함하면 기초노령연금의 2009년도 예산은 총 3조 4,731원에 이른다(박인화, 2008).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는 65이상 전체 노인들의 509만 명 중에서 356만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보건복지부, 2010), 실제적으로는 2009년도 9월 현재 전체 노인의 68.6%인 총 358.5만 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9년도 시도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지역의 경우에는 본 제도의 수급률이 85.8%에 이르고 있으나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수급률이 52.8%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는 대상자 선정 기준액의 소득기준은 지역별로 동일하고 재산 기준역시 대도시와 농어촌 간의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률이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초노령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의 5%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본 제도의 연금액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변경되면 이에 따라서 본 제도의 연금액도 변경될 수 있다. 2010년 4월부터는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0,000원, 노인부부수급자는 매월 최고 144,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수급자들 중에서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0).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전달체계 및 관리운영 체계를 살펴보면 본 제도가 선별적이고 부조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보편적 제도보다는 본 제도의 신청과 대상자 선정에 많은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본 제도는 신청주의에 입각하여 본 제도에 신청하시고자 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65세 생일이전 2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다. 그리고 65세 생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된다.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본 제도의 대상자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는 소득·재산 기준은 독거노인들의 경우에는 70만 이하, 노인부부인 경우에는 112만 이하 인 경우에 해당된다. 그리고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은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여 위의 기준지급의 자를 대상자를 선정한다. (보건

복지부, 2010)

기초노령연금에 관련된 개선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위상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노령연금은 공공부조로 규명하기에는 대상자가 노인의 70%에 이르고 있어 보편적 특성을 갖고 있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험으로 규정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소득과 재산기준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사회수당(Demogrant)으로 간주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김용하, 2007).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들을 위한 공적 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한 부가 급여 적 성격과 함께 국민연금의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저소득층과 일정수준 이하의 재산 및 소득을 가진 노인들을 위한 무각출 연금적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다(손미정, 2010).

기초노령연금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본 제도를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되기까지 보완적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연금이 성숙한 이후에도 저소득 노인들의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과 궁극적으로는 보편적인 기초연금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지에 대하여 명확한 위상 정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용하, 2007, 손미정, 2010).

기초노령연금은 1998년부터 시행되었던 경로연금을 보다 확대 개편하여 새로운 제도로 발전되고 있지만, 경로연금이 시행되면서 제기되었던 제도의 모호한 성격과 위상의 문제가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제도를 보완하는 한시적 제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폐지될지 아니면 노후소득보장체계의 2차 안전망으로서 공적연금의 보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설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제도를 부조적 성격을 지닌 선별적 급여를 시행할지 아니면 노인들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보편적인 급여로 시행할지에 따라서 본 제도의 재정부담 주체와 관리운영주체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대상자 선정 방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제도가 많은 신청자들 중에서 적합한 소수의 대상자를 선별해야 하는 기존의 공공부조 선정방법을 지향하고 전체 노인들의 70%를 선별할 수 있는 단순한 기준이나 방법을 모색하여 행정비용이 초래되는 현재의 대상자 선정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으로 이미 과중한 사회복지 행정 업무 부담을 가지고 있는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보다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박인화, 2008). 앞으로 선별적인 급여의 형태로 지속된다면 대상자 선정에 많은 비용이 초래될 것이고 보편적 급여로 정책방향을 지향한다면 대상자 선정에 따른 행정비용을 대폭적으로 감소시킬 수도 있다.

셋째, 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의 수준을 연계하여 노후소득에 필요한 적정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본 제도의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5%기준으로 2010년 4월부터는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0,000원, 노인부부수급자는 매월 최고 144,000원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0). 그러나 본 제도는 소득과 재산의 수준에 따라서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되는 구

조이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의 경우 최저 2만원에서 최고 9만원까지 그리고 노인부부의 경우 최저 4만원부터 최고 14만 4천원까지 차등적으로 연금을 받는다. 최고수준의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본 제도의 급여수준이 낮은 편인데 감액된 급여를 받을 경우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에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급여수준이다. 정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향후 2028년까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의 10%를 지급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수급자 인원을 확대할 경우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예산보다는 보다 더 확대되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기초자치단체들의 부담은 더욱 더 가중될 경향이 높다.

앞으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개선하기위하여 지방비의 비중을 더욱 폭적으로 감면하거나 국고에서 지자체 부담 없이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노인인구 증가율, 노인 빈곤율 및 공적연금제도의 성숙도를 충분하게 고려하여 향후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성격, 급여율, 연금액 수준 및 지급 범위 등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해 나가야 한다.

6. 사회서비스 분야⁸⁾

1) 사회서비스의 현황 및 이슈

앞으로는 국민들의 복지 체감성을 확충하기위하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이외에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주요 사회서비스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취약계층 노인에게 가사지원서비스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부양가구가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 2) 장애인활동보조: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3) 장애아동재활치료: 성장기에 있는 장애아동들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4) 가사간병방문: 장애인, 중증질환,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에게 무료간병 및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5) 산모신생아도우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을 실시; 6)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 7) 아이사랑카드: 영유아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보조금형식으로 지원하였던 보육료를 부모가 직접 결제하여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 8)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지역사회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⁹⁾

8)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안).

<표> 서비스 신청자 및 대상자 현황

(단위: 명)

사업명	신 청 자			대상자 (2012년 1월)	(서비스개시)
	2009년	2010년	2011년		
계	938,344	931,124	970,227	706,616	-
노인돌봄종합	8,623	25,252	13,446	41,362	2007.5
장애인활동보조	11,318	5,835	6,885	-	2007.5 (2011.10 사업종료)
장애인활동지원	-	-	6,291	46,675	2011.11
지역사회서비스투자	367,681	308,038	386,507	231,963	2007. 8
산모신생아도우미	58,747	72,118	63,291	24,028	2008. 2
가사간병방문	18,864	3,481	1,781	11,702	2008. 9
장애아동재활치료	20,117	16,798	11,839	42,589	2009. 2
언어발달지원사업	-	319	1,066	1,356	2010. 8
임신출산진료비	452,994	499,283	479,121	306,941	2008.12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표> 사회서비스 바우처 예탁 및 이용현황

(단위: 백만원, 명)

사업명	2009년				2009년				2009년			
	예탁금				예탁금				예탁금			
		인원	정부 보조	본인 부담		인원	정부 보조	본인 부담		인원	정부 보조	본인 부담
계	567,993	1,263,599	532,593	14,077	586,072	1,300,760	669,759	20,865	830,300	1,369,225	770,656	20,595
노인돌봄종합	28,684	15,223	27,198	3,555	76,681	34,490	76,799	4,699	88,211	37,728	82,568	4,787
장애인활동보조	182,174	31,636	181,524	6,900	201,261	32,691	201,676	11,213	169,604	33,360	162,990	8,962
장애인활동지원	-	-	-	-	-	-	-	-	95,802	35,371	66,695	3,267
지역사회투자	110,847	485,221	94,254	-	153,889	463,650	145,741	-	183,421	473,922	168,408	-
산모신생아도우미	33,728	53,410	30,976	3,622	36,315	67,420	38,810	4,953	33,960	57,848	33,101	3,578
가사간병방문	70,955	33,281	65,888	-	33,697	27,953	32,596	-	18,855	10,539	17,699	-
장애아동재활치료	40,189	18,005	29,837	-	62,336	31,661	54,804	-	70,179	39,582	70,426	-
언어발달지원사업	-	-	-	-	796	196	119	-	3,178	1,213	2,333	-
임신출산진료비	101,416	626,832	102,916	-	21,097	642,699	119,214	-	167,091	167,091	166,436	-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 관련 주요 이슈 및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1) 어떠한 근거와 기준으로 현재의 사회서비스들을 만들었는가; 2) 2007년도 이후 시행된 각각의 사회서비스들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3) 현재 사회서비스들에 투입되는 예산, 급여 및 수급자 인원 등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문제; 4) 각 사회서비스의 급여자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절대 빈곤층을 포함한 차상위 계층에게만 국한 시킬 것인지 or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하는지; 5) 기존의 정부 및 지자체 사업과 현재 사회서비스와의 중복성의 문제? 이중적 수혜의 문제; 6)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의 방향과 원

9) 예전에는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서 다루던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을 현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음.

칙?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의 활성화 방안, 기존의 사회복지관련 기관과의 관계설정의 문제; 7)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신규 사회서비스의 개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지역의 특성 반영, 사회복지전달체계 및 기관들이 미비한 지역에 대한 개선책; 8)새롭게 신설되어야 할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들은, 어떠한 시스템이나 절차를 통하여 신규 사업을 개발해 나가야 할지, National Committee의 구축 or 대국민 의견의 상시적인 수렴; 9)외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들의 검토? 외국에서 성공한 사회서비스들의 선별적인 도입 및 확산 문제; 10)사회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의 수급문제, 누가 사회서비스 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지역 사회서비스 관리원의 필요성; 11)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간의 연계성 확보 문제; 12) 현재 사회서비스들에 대한 대국민 홍보방안의 문제 및 개선책; 13) 현재의 사회서비스들과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간의 관계 설정; 14)장기적 차원의 사회서비스의 재정마련 및 중장기 발전방안.

7. 기타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

- 국민들의 복지 체감성 확대를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구축
- 계층별 소득에 고려하여 모든 국민에게 복지서비스의 제공
-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 및 사각계층의 해소
- 복지 분야에서의 유사전문가의 배제 및 전문가 활용
-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실무자의 노동조건과 임금개선
- 사회복지시설의 위탁방안의 선진화 방안
- 과도한 순환보직제로 인한 일반 행정직공무원 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통한 전문성확보
-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간의 연계성 확보
- 최저임금 및 최저생활보장의 현실화
- 공공부조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의 단계적 완화 혹은 철폐
-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 노인복지제도의 개선 및 정책 개발
-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의 전면적 개선 및 확대
- 모든 국민의 인권과 복지권이 보장되는 사회

V. 복지재원 마련 방안

1) 현행유지 VS 증세방안

사회보장을 위한 확충을 위하여 기업에 대한 세금이나 법인세를 높인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기업자체를 외국으로 옮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세금증세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이탈한다면 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가장 높

은 북구유럽 국가의 기업들은 모두 자국을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제한적으로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세금회피를 위하여 해외로 이탈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국에 있습니다. 선진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는 개인이나 기업의 소득이나 이익이 증가할수록 세금을 덜 내는 역진적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외국처럼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누진적 체계로 개선해 나가서 조세의 형평성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직장인들이 자영업자들에 비하여 조세부담이 높은 것도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복지재원의 마련은 중앙정부의 조세에 의하여 조성한 것이지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그 규모도 국가의 복지재원에 비하여 적은 규모이고 대부분의 사용처는 기부 기업이나 개인의 뜻에 따라서 국가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역을 보충하는 역할만을 담당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체계의 재원을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를 통하여 조성할 수도 없고 만일 강제적으로 조성한다면 기부문화의 자발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준조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는 민간의 사회참여 측면에서 기부문화가 확산되도록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렇게 기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공공 사회보장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합당하지 않고 국가의 역할을 개인이나 기업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회보장의 재원이 부족하다면 국민을 설득하여 합리적인 증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 정부의 복지재정에 135조원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아직도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하여 국가의 사회보장에 대한 공적지출은 10%미만으로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국가의 사회보장재원에 대한 지출속도만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빠른 편일뿐이다.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예산절감이나 소득공제축소 등의 임기응변식 방안으로는 적절한 사회보장체도를 구축하기에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규모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그리고 부유세 등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증세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세저항이 심한 기업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공공복지지출 향상을 위한 또 다른 대안?: 국민연금 복지투자사업

○ 관련 규정

- 국민연금법 및 연금기금운용 지침 상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인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기금 신규여유자금의 1%이내에서 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매년 신규여유자금 30조원의 1%인 3000억 원씩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수급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자금의 대여, 복지시설의

설치, 기타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는 매년 신규여유자금의 1%내에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다.

- 기금의 복지사업 대여 이자율은 소비자 물가상승 이상의 수준에서 기금운영위원회가 정한다.
- 신규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은 사업기간 동안의 수익률이 무위험 이자율인 해당기간 국고채권 수익률이상인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기간이 5년인 경우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이상이어야 함).¹⁰⁾

O 현황

-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2008년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을 끝으로 지난 3년간 한건의 복지사업도 시행하고 있지 않음.
- 최근 5년간 국민연기금 투자 중에서 복지사업의 비중은 0.5%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음.
- 2007년 복지사업 연기금 중 0.1%(2036억원)를 차지하며 수익률은 1.5%를 기록, 해마다 평가액은 경감하여 2011년 7월 기준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기금자산(343조원) 중 복지부문 평가액 1183억원 규모로 전체 운용기금의 0.03%에 불과함.
- 2000년 1.16%(7176억원)에서 2007년 0.09%(2036억원)로 1%대 밑으로 떨어진 이후 2011년 7월 현재 0.03%로 무려 83%나 줄어들었음.
- 2008년에 시행되어 같은 해 종료되었던 신용회복 대여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은 2885억원, 정책대상자 29만 3000명이었으나 실제 지출은 186억원(6626명)에 그침.

O 이슈 및 문제점

- 국민연금법상 복지사업은 기금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수익성 있는 복지사업을 찾기가 어렵다(공단)
- 복지사업 자체가 수익률이 낮은 것이 아니라 현실성 없는 사업계획 없이 행해지다 보니 수익률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복지사업이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10) 2012년 3월 현재 국고채권 수익률 3년물(3.40%~3.60%), 5년물(3.52%~3.70%)

○ 국민연금의 복지사업 투자의 의의

- 국민연금이 복지사업을 통해 특정분야나 문제(저출산, 보육, 고령화 등) 해결에 기여할 경우 복지사업 투자는 가입자와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연금급여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 국민연금은 수익률만을 기준으로하지 말고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여 복지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 연기금의 복지투자 사례

-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은 전체자산의 30%를 복지사업에 투자하고 있음.
- 사학연금은 총기금의 20% 수준을 복지사업에 투자하고 있음.
- 핀란드 연금기금의 3-4%를 복지사업에 투자하고 있음.
- 독일은 재활병원 설립에 투자하고 있음.

○ 개선방안

- 공공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를 위하여 국민연금 복지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과 계획, 그리고 수요조사를 통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해야 한다.
-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 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개별사업에 대한 일회적 자금대여 위주를 지양하고 중장기 복지사업 투자 로드맵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복지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 국민연금 기금의 일부를 금융부문 기금운영과 분리하여 별도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복지사업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독립적인 복지사업 관리운영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시설 투자전략

-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에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함.
- 공공성, 수익성,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적격 시설의 유형을 선정한 결과 노인복지시설, 의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휴양시설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시설사업유형별 종합평정 사례

평가항목	배점	평점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의료시설	휴양시설
공익성	40	40	32	32	32	16
수용성	20	20	16	12	12	8
경제적타당성	30	18	0	6	6	6
정책적기여도	10	8	4	2	8	2
총계	100	86	52	54	58	32

(출처: 유상현(2005) 국민연금기금의 사회복지시설 투자방안. 연금포럼 vol. 19).

- 2011년 1월 6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건립 및 운영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복지사업을 검토하였음. 수도권 지역 실버타운 소형모델의 건립예산은 150세대, 부지 2만1천500평 규모로 부지매입비 52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천140억원 추산됨. 노인복지타운의 사업 타당성조사 결과 입주율 90%를 기록할 경우 수익률이 4.94%를 상회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실버타운 건립, 주택연금, 노후긴급자금 대야 사업 등을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최종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 사회복지시설 투자 시 국민연금기금이 단순한 자금공급원으로서의 역할에 국한하는 간접투자방식보다는 시설개발 및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복지사업 전개의 근본취지를 살리면서 직접투자방식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이를 위하여 영국과 일본의 복지시설서비스 공급체계인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제도를 모델로 하여 BTL사업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단 정부가 복지시설의 확충에 있어서 BTL 구조를 활용할 의지를 가지고 정부고시사업으로 입안해야 함, 그리고 민간의 사업제한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야 함).
- 혹은 북미 및 유럽의 공공개발 및 복지투자주체의 전형인 “사회책임투자기업(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Enterprise)을 모델로 (가칭) 국민연금 복지투자사업단의 설립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표> 국민연금공단 정보공개 자료: 국민연금 복지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대상	시행시기	종료 근거
민간보육 시설자금 대여	▪ 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	▪ 법인, 개인	▪ '94. 10. 1. ~ '98. 12. 31. (종료)	▪ 사업계획
노인복지 시설자금 대여	▪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자금 융자	▪ 지자체, 법인, 개 인	▪ '95. 2. 1. ~ '00. 12. 31. (종료)	▪ 사업계획
생활안정 자금대여	▪ 전세자금, 학자금, 의 료비, 경조사비 등의 자금 대여	▪ 가입기간 5년(장 래인 3년) 이상인 사람	▪ '97. 2. 1. ~ '03. 12. 31. (종료)	▪ 기금운용위 원회 결정 ('03년 2차)
생계자금 대 여	▪ '97년말 IMF 경제위기 당시 실업자가 급증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였던 사람들을 대상으 로 생계비 등을 대여	▪ 사업장 가입자이 었던 사람 중 반 환일시금을 수령 하지 아니하고 소 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 람	▪ '98. 5. 11. ~ '98. 12. 31. (종료)	▪ 사업계획
신용회복 지원대여	▪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금융채무불이행 자에게 채무조정액 대 여	▪ 국민연금 가입이 력이 있는 금융채 무불이행자 중 대 여가능액(납부보 험료 50%) 내에 서 채무조정액을 상환 가능한 사람	▪ '08. 6. 2. ~ '08. 12. 31. (종료)	▪ 사업계획
복지타운	▪ 가입자 및 수급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 가·휴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리조트 시설 운영	▪ 가입자, 수급자 및 일반인	▪ '94. 7 ~ 계속	

VI. 복지국가를 향한 적극적 복지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필요성

200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소득의 양극화, 중산층의 붕괴, 고용불안 및 불평등의 심화 등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복지와 고용이 선 순환하는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의 해결 방안으로서 복지와 고용의 연계성은 매우 필수적이다.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지난 정부들이 시행해 왔던 경제개발형 복지체제만으로는 성취하기 어렵고 선진복지국가들이 추구해왔던 복지제도의 장단점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합리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우리나라 문화와 토양에 적합한 한국형 복지체제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고용과 복지의 연계성의 확보는 그리 쉽게 성취되지 않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복지체도로 복지체도에서 노동시장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특히 복지와 고용을 연계해 나갈 수 있는 정치, 경제 및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복지와 고용의 상호보완성을 인식하게 복지확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계층별 소득수준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특히 북구유럽의 복지국가들이 활용하고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적극적 사회정책을 함께 병행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하여 현재의 관련 복지제도 및 노동정책들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복지와 고용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고용과 복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는 북구 유럽 국가들의 노동정책과 복지정책들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어떻게 이들 국가들이 경제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불평등 축소, 고용확대 및 창출 그리고 복지국가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성공적 경험들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복지환경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전략들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필요하다.

고용이 확충된다고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외국의 경험들 살펴보면 실업률이 낮아진다고 국민의 삶의 질이 저절로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사회적 위험(Social Risk)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가 구축되었을 때에 진정으로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고용과 복지의 연계성 확보는 국가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핵심적 과제이다. 노동시장과 복지제도의 연계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어떠한 노동시장의 특성 및 환경 그리고 분배제도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며 어떠한 과정과 방향으로 나아갈지 합리적인 복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단지 중앙정부의 의지로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장기적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목표들을 현실화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및 노동환경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국가단위의 연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근로빈민 및 비정규직 증가, 소득의 양극화, 대기업 편중 및 중소기업 침체 등의 심각한 제 노동시장관련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동시장 정책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고 또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적극적 복지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행정부처의 이원화로 노동시장제도와 복지제도의 상호보완성이 매우 결여되고 상호경쟁적인 상황으로 두 제도간의 연계성의 확보가 매우 취약하다. 실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대상자의 프로그램들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효과적인 복지와 고용의 연계성의 확보를 위하여 이원화된 행정부처나 전달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매커니즘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단위에서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각각의 방안에 필요한 자원들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한다.

또한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적정부담과 정적급여를 통한 실질적인 노후소득의 보장의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체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국민연금 제도와 연계해 나갈 것 인지? 그리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의 해소 방안과 기업퇴직연금의 활성화 방안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편적 의료서비스의 제공도 중요하지만 비 급여 의료항목의 증가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만성질환이나 중증의 환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서 빈곤화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보험 급여기간의 확충과 급여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고용보험이 실업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실업기간 동안에 재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훈련과 적합한 취업정보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의 고용보험 전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편적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현재 민간기관 중심의 보육전달체계를 지양하고 국립과 공립시설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보육체계의 공공성을 보다 확보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존의 민간기업 중심의 주택개발을 지양하고 공공장기 임대주택을 보다 확충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빈곤계층 및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계층별 및 소득구간 별 차등하여 주거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주거 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실업에서 노동시장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인중심 비공식지원체계에 의존하는 자구적 노력보다는 기존의 노동시장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의 개선, 획기적인 직업정보 및 취업알선의 개선, 실제적인 개인별 맞춤형 직업훈련 및 재훈련, 자영업 창업지원 및 임금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북구 유럽에서 성공했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공공근로사업역시 기간과 보충적 급여지급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데 개별근로자의 근로능력과 직업적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근로사업과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성을 보다 확충해 나가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구직과 취업알선을 개별근로자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연계하여 개별근로자의 직업적 능력과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이나 직종에 신속하게 재취업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직업훈련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여 우리나라 산업 및 기업에 적합한 직업훈련제도를 강화하고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지역사회내의 직업훈련시스템을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 특히 고령근로자, 장애근로자 및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

교육과 훈련에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공교육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의 교육시스템만으로는 우리나라 산업에 필요한 인력들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과도한 상급학교 진학, 고용불일치 및 이공계 기피현상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리나라 산업의 특성과 방향에 부합하는 인력을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학력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다양한 분야의 산업계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이 가능한 산업계 관련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보다 확충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이나 3D업종에 적정임금을 제공하는 방안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제도를 향상시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육아 및 가사에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및 가족부양 관련 휴직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휴직급여의 현실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육아와 가사로 인하여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개인별 맞춤형 직업훈련 및 재훈련을 일정기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전문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들의 효과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효과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맞벌이 가정의 보육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의 제도화를 통한 획기적인 확대가 매우 시급하다.

퇴직 및 장애에서 재취업을 위해서 고령근로자들의 사회적인 편견 및 차별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고용을 위하여 정년연장, 임금 피크제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강화 등에 대한 대책을 강화시켜나가야 한다. 특히 베이비부머들의 재취업과 직업훈련을 위하여 중년근로자들에 대한 혁신적인 고용대책과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장애근로자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이전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장애인관련 교육제도와 훈련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재해나 후천적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근로자들에게 잔존하는 근로능력을 유지하고 배양하여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개인별 특성에 부합하는 재활과 직업훈련제도를 체

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 및 국민의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하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용 친화적 복지제도의 구축도 필요하지만 복지 친화적 고용제도의 필요성도 강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동시에 노동시장의 제도에 대한 개혁과 혁신도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제도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가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사회보험이 근로자들의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고 각각의 보험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복지과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를 위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단순한 급여제공의 목적으로 활용되기보다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와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한명의 국민이라도 실업 및 산재를 극복하고 의존적인 부양대상자로 남기보다는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여 생산적인 근로자로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들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적정한 재원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복지 및 노동제도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개선하는 작업과 함께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원조달 및 조세증대를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 부유세 도입 및 자영업자 소득과약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업측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리후생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양산과 과도한 사내하청의 증가 등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노동시장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근로빈곤층(Working Poor Class)의 빈곤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적정한 최저 임금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은 경쟁력 유지와 이윤의 극대화를 빌미로 구조조정과 해고를 통하여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는데 각각의 기업에서 실직자 및 실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직지원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정부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복지 친화적 고용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모든 기업복지차원의 근로자후원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을 제도화해야 한다.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카페테리아식 근로후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업복지프로그램의 혜택의 차이는 매우 현격하다. 그리고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장들을 위한 근로자후원프로그램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제도가 분리되어 경쟁하는 구도로 정착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광역 지자체에서는 기존의 복지 및 노동제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재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특히 지역사회단위에서의 노동시장제도와 복지제도는 전혀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역사회 단위에서 복지와 고용이 효과적으로 연계되고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또한 복지와 고용을 지역단위에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작업역시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수급자를 위한 자활지원사업, 빈곤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노인, 장애인 및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 역시 각각의 행정 부처들이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역단위로 고용기관, 복지기관, NGO, 기업, 주민조직 및 시민들이 협력하고 통합하여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도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갈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정부중심의 거버넌스를 지양하고 지역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고용과 복지를 통합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의 구축도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지역공동체 그리고 나아가서 복지국가로 향해가는 데에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 론 문

김 동 열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수석연구위원)

1. 발제문에 대한 코멘트

새 정부의 복지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보완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유익한 내용이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의 증가에 대응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을 통해 기초생활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급여지급 방식을 현재의 통합급여 방식에서 가구별 특성에 맞춰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그 밖에 기초노령연금 개선 방안, 사회서비스 사업의 개선 방안, 복지 체감도 확대를 위한 전달체계 구축 등을 포괄적으로 제안하고 있어서 새 정부가 복지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참고할 부분이 많다.

복지재원 마련 방안에 관해서도 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예산 절감이나 비과세감면의 축소 등 임기응변식 방안으로는 복지 재원 마련에 턱없이 부족하므로 합리적인 증세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일부 견해가 다른 점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세제가 역진적이라고 지적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세제는 종합소득세(6%~38%)¹⁾, 양도소득세(6%~38%), 법인세(10%~22%), 상속세(10%~50%), 증여세(10%~50%) 등 대부분의 세금이 누진적 체계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 1천2백만 원 이하는 6%, 3억 원 초과 38%로서 세율이 누진적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자영업자에 비해 높다고 하지만,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자의 40%가량²⁾이 기준소득에 미달하거나 소득공제 등으로 인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누진적 세제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국민부담률³⁾이 25%까지 증가해 왔으며, 이런 점에서 새 정부가 세율을 추가로 올리기가 쉽지 않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다른 선진국과 달리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012년 현재 국민연금의 적립 규모는 388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923조 원, 2040년에 최대 2,465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물론 2060년에 기금이 다 바닥난다는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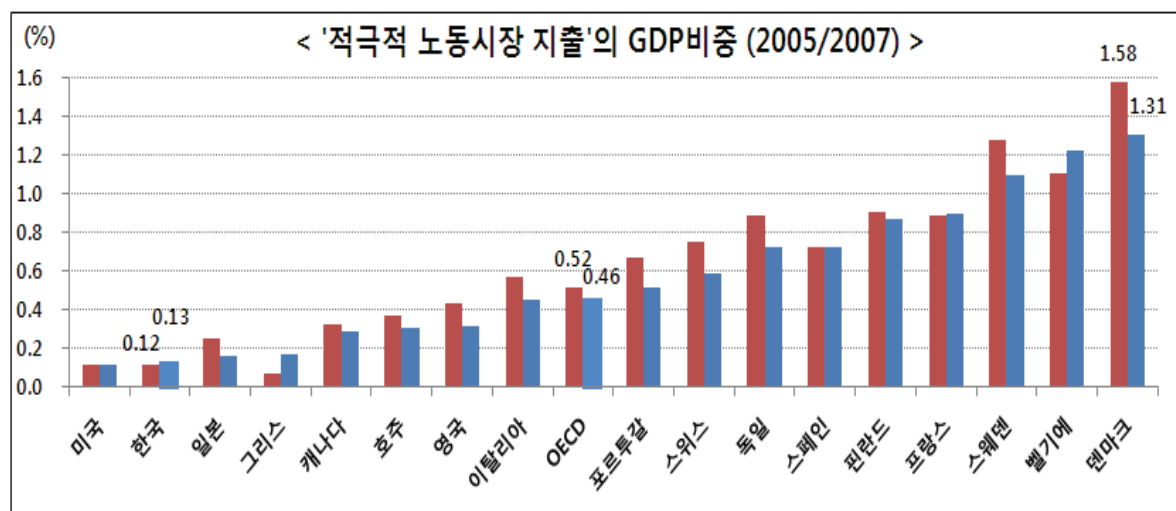
1) 과세표준 1천2백만 원 이하는 세율 6%, 1천2백만 원 초과~4천6백만 원 이하는 세율 15%, 4천6백만 원 초과~8천8백만 원 이하는 세율 24%, 8천8백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세율 35%, 3억 원 초과 38%

2)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는 595만5천 명, 종합소득세 면세자 수는 140만 명으로 총 735만 명이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

3) 우리나라 조세 수입과 사회보험료 수입의 합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국민부담률'이라고 함

기예측이 나와 있지만, 늘어난 재원을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 저출산 대책을 얼마나 잘 집행하여 효과를 내느냐에 따라 국민연금의 고갈시기는 얼마든지 뒤로 더 늦춰질 수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성격상 가입자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에 투자하자고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민간과 합작하여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PFI, BTL 등의 다양한 자금조달과 사업수행 방안을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아울러, 향후 주택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한 ‘렌트 아파트’⁴⁾를 공급하고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대체투자의 일환으로서 충분히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고용과 복지의 연계성 강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⁵⁾의 강화에 대해 강조하신 점에 대해서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우리나라의 지출 비중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며, 고용정보 서비스와 직업훈련 서비스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자료 : OECD SOCX Data (http://stats.oecd.org/wbos/default.aspx?datasetcode=SOCX_AGG)

주 :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포함됨

4) 서양식으로 매월 월세를 지불하는 아파트를 '렌트 아파트'라고 칭함

5)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란 실업 이후의 대책이 아니라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으로서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 직업훈련 및 고용정보 서비스의 내실화 대책 등을 들 수 있음. 관련 예산과 지출로서는 고용안정을 위한 지출,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투자, 산전후 휴가 급여 등이 포함됨

2. 새 정부의 복지자원 조달 관련

새 정부 출범 이후 큰 숙제로 남아 있는 복지자원 조달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하여 저의 개인적 견해를 조금 더해보고자 한다.

지난 2월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작년 선거에서 공약한 것처럼 복지 확대에 전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건 사실이다. 2012년 현재 공공 사회복지지출이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로서 OECD 회원국 평균 21.7%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며, 선진국들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였던 지난 1990년의 OECD 평균 17.6%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수준에 불과한 합계출산율 1.2를 OECD 평균 1.8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복지 지출을 대폭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복지지출을 늘려야 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는 많다.

〈 공공 사회복지지출의 GDP 비중 비교 〉

(GDP 대비 %)

	미국	스웨덴	독 일	영 국	일 본	한 국	OECD 평균
2012년	19.4	28.2	26.3	23.9	-	9.3	21.7
2010년	19.9	28.3	27.1	23.7	22.4 (2009년)	9.2	22.0 (2009년, 22.1)
2000년	14.5	28.4	26.6	18.6	16.3	4.8	18.9
1990년	13.6	30.2	21.7	16.8	11.3	2.8	17.6
1980년	13.2	27.2	22.1	16.5	10.4	-	15.6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13

주: 일본은 2009년이 가장 최근 데이터임.

이처럼 늘어나는 복지 지출을 감당하려면 복지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데, 복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복지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출 구조조정으로 하고 증세는 최소화하겠다고 새 정부는 발표하고 있다. 즉, (1)예산절감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71조 원, (2)세제개편과 세정개혁,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5년간 모두 48조 원, (3)복지행정 개혁과 기타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5년간 15.6조원을 조달하며, 이러한 3가지 방안에 따라 5년간 총 134.6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박근혜 정부의 복지 자원조달 계획 〉

(단위 : 조 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세출 구조 조정	재량지출 7% 축소	4.9	10.2	10.6	11.1	11.6	48.5
	구조조정대상 7% 축소	0.0	2.5	2.3	2.1	2.0	8.8
	실효성점검대상 2% 축소	0.0	1.6	1.6	1.7	1.7	6.6
	기타 지출절감	0.0	2.3	2.3	2.3	0.0	7.0
	小計	4.9	16.6	16.9	17.2	15.3	71.0
세수 확대	비과세감면 축소	1.4	3.0	3.3	3.5	3.8	15.0
	탈루세금(지하경제) 축소	4.0	5.6	6.0	6.3	6.7	28.5
	금융소득 과세 강화	0.01	0.8	1.1	1.2	1.3	4.5
	小計	5.4	9.4	10.4	11.0	11.8	48.0
공공 부문 개혁	복지행정 개혁	1.9	2.0	2.1	2.2	2.4	10.6
	기타 공공부문 개혁	1.0	1.0	1.0	1.0	1.0	5.0
	小計	2.9	3.0	3.1	3.2	3.4	15.6

자료: 새누리당

작년에 다양하게 제시된 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5년간 약135조 원 가량의 복지 예산이 필요하며, 그 무거운 짐을 국세청,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행정 각부에서 나누어지겠다고 한다.

첫 번째 무거운 짐은 국세청이 짊어지겠다고 자청했다. 늘어나는 복지 지출 가운데 5조~6조 원가량은 국세청에서 책임지겠다고 한다. 돈보기를 과거보다 더 세밀하게 들이밀어서 거둬들이겠다고 한다. 불법거래와 탈세 등 지하경제도 양성화하여 세원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세청이 열심히 뛰면 그동안 과세와 면세의 경계선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던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가운데 일부가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될 것이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면 소위 나쁜 기업가들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어차피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꺾어야 할 통과역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지만,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겪게 될 금단현상과 부작용은 미리미리 살펴서 최소화해야 한다.

두 번째 무거운 짐은 기획재정부가 짊어져야 할 것이다. 소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매년 15조원 안팎의 복지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 작년 대선 공약이었다. 올해 정부 예산은 340조원이 넘는다. 그 중 약30%, 100조 원가량이 복지 예산이다. 앞으로는 국방 등 다른 정부 서비스에 들어가는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복지 예산에 더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선진국은 나라 예산의 50% 이상을 보건복지 분야에 투입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30%에 못 미치므로 차차 그 비중을 늘려가겠다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루아침에 다른 예산을 싹둑 잘라서 복지 예산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그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제 관련 예산의 비중이 아직도 20% 안팎에 이르지만, 선진국은 대부분 10% 미만이므로 경제분야 예산을 줄여서 복지분야 예산을 늘릴

여지는 남아 있다. 다른 분야 예산도 마찬가지로 줄일 부분을 찾아서 줄여나가는 것은 기획재정부 등 예산당국의 큰 숙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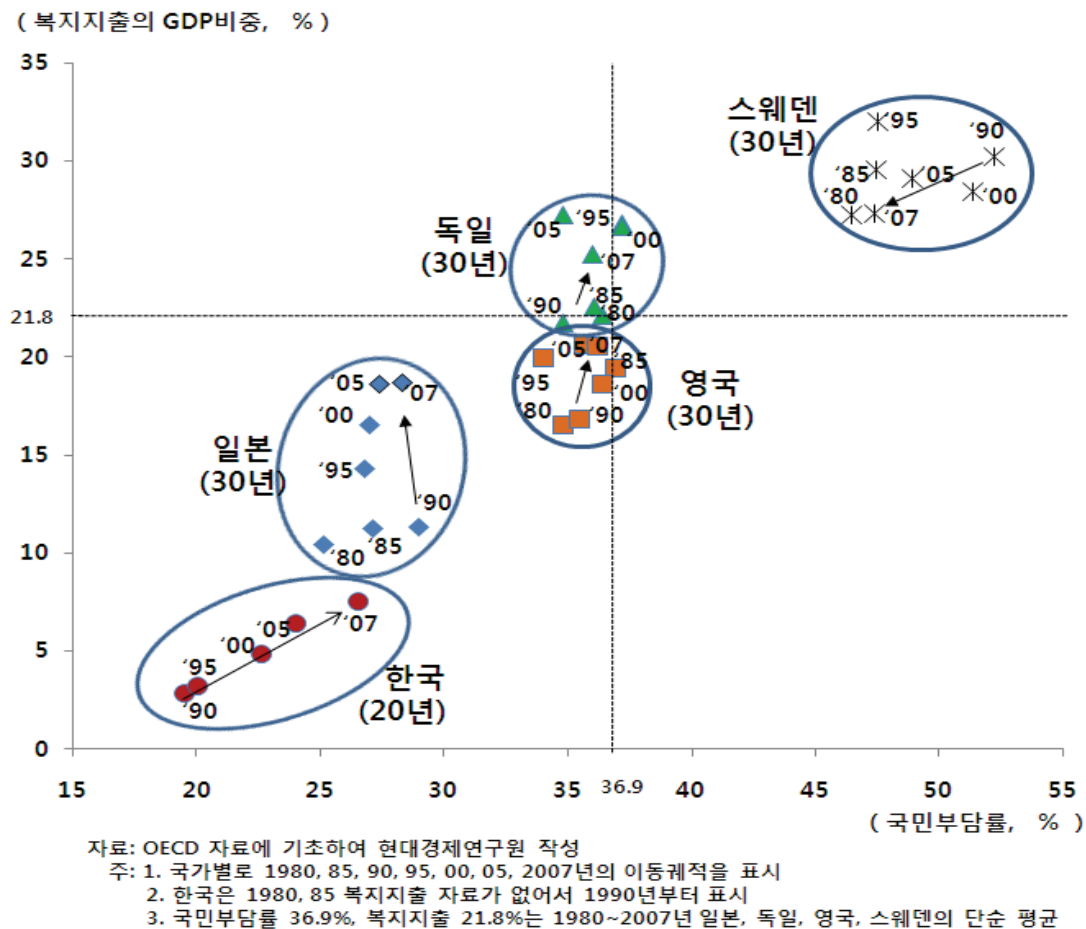
세 번째 무거운 짐은 복지행정을 전담하는 보건복지부가 짊어져야 한다. 최근 100조 원까지 급격하게 늘어난 복지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복지행정의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복지예산이 중복되어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일에도 소홀해선 안 된다. 새누리당에서는 복지행정 개혁과 기타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5년간 약16조 원을 조달하여 새로운 복지서비스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매년 연말에 각 행정부처의 예산을 확정하는 시기에 각 사업별로 100억 원과 200억 원을 삭감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과연 복지행정과 기타 공공부문에서 제살깎기를 통해 16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을 내어놓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복지행정을 전담하는 보건복지부부터 술선수범하여야 다른 부처에서도 따라올 것이다.

위와 같은 행정부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국회만 뒷집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사회복지세의 신설이나 부가가치세의 인상 등 증세 방안은 결국 국회에서 해결해 줘야 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증세의 불가피성을 설득해야 하며,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2010년 현재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우리나라가 25%수준이지만, 독일은 36%, 스웨덴은 46%, OECD 회원국 평균은 34%에 달한다. 복지서비스를 독일이나 스웨덴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수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최근 국책연구원인 조세연구원에서 부가가치세를 현재 10%에서 12%로 올리자고 제안한 바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복지 예산의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세세한 액션플랜을 수립함에 있어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국가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중장기 복지지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로드맵’이 있어야, 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길을 잃거나 헤매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스웨덴과 같은 고부담-고복지의 북유럽 모델을 따라가기란 쉽지 않다. 아니면,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저부담-저복지 모델을 따라갈 것인가? 이 모델 역시 현재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높은 요구 수준을 감안한다면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방안은 독일이나 영국과 같은 중부담-중복지의 대륙형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GDP의 9%정도에 불과한 공공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당장에 20% 수준으로 올릴 수는 없다. 그리고 현재 25% 정도의 국민부담률을 선진국 평균인 34% 정도로 차차 높여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 복지지출 비중과 국민부담률의 과거 경로(path) 〉



둘째, 복지 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013년도 우리나라 재정의 가장 큰 특징은 6년 연속 적자 재정이라는 점이다. 복지를 비롯한 정부 지출의 증가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재정적자 규모와 비중은 올해 예상되는 GDP의 0.3%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리고 2013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는 464.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GDP 대비 비율은 33.2%에 달할 전망이다. OECD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100%를 넘어서고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33%라면 상당히 건전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안심할 수 없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0년 111조 원에서 2013년 465조 원으로 13년 만에 4.5배가량 증가했으며,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00년 18.4%에서 2013년 33.2%로 크게 높아져 있다. 더 큰 문제점은 고령화, 복지수요 급증 등 미래에 다가올 위협요인이 많다는 점이며,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와 같이 숨어있는 잠재적 부채(위협요인)도 많다는 점이다.

〈 국가채무비중과 국민부담률 국제 비교 〉

(단위: GDP 대비 %)

	미국	스웨덴	독 일	영 국	일 본	한 국	선진국
국민부담률 (2010)	24.8	45.5	36.1	34.9	27.6	25.1	33.8 (OECD 회원국 평균)
국가채무비중 (2012)	107.2	37.1	83.0	88.7	236.6	33.5	75.6 (선진 34개국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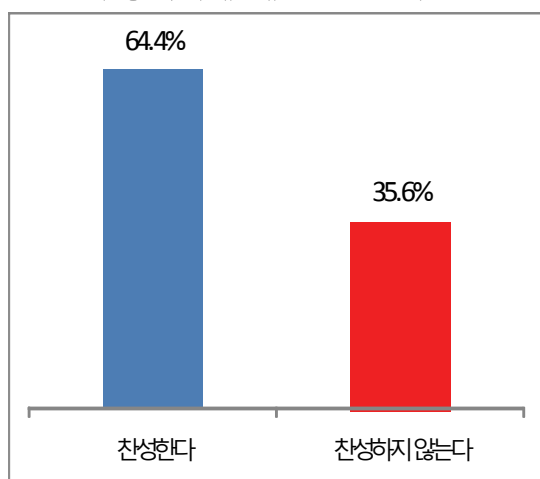
자료: IMF (국가채무), OECD (국민부담률)

주1: 국가채무 비중 = 일반정부 총부채 / GDP

주2: 국민부담률 = (세금+사회보험) / GDP (*조세부담률=세금/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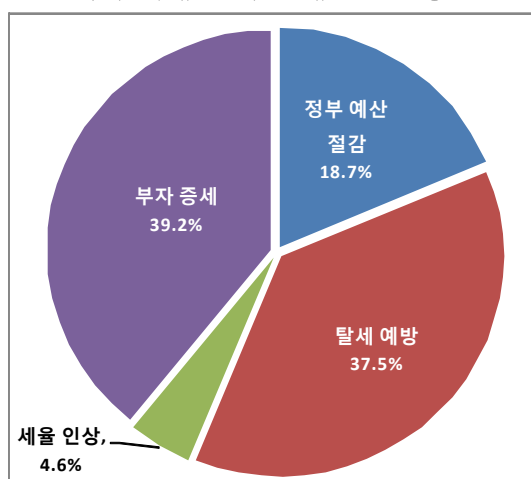
셋째, ‘눅프’ 현상과 같은 국민들의 증세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해야 한다. ‘복지 확대는 찬성하지만, 자기부담은 싫다’는 것이 ‘눅프’(NOOMP, Not Out Of My Pocket)현상⁶⁾이다.

<무상복지에 대한 찬반 의견>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2.4)

<복지 확대를 위한 자원조달 방안>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2.4)

예를 들어, 부가세 2%p 인상은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격이라며 반대할 것이고, 고소득자 증세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보수층과 경제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가 확대되는 만큼 세금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알리는 용기 있는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 복지지출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면, GDP의 25% 정도인 우리의 국민부담률을 선진국 수준, GDP의 34% 정도로 점차 올려가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우리의 복지 서비스를 좀 더 개선하는 것이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서도 필요

6) 현대경제연구원(‘복지의식의 이중성과 눅프 현상’, 경제주평12-12, 2012.4.2)에 따르면, 복지확대를 위한 자원조달 방안으로 ‘부자증세’(39.2%), ‘탈세예방’(37.5%), ‘정부예산절감’(18.7%), ‘세율인상’(4.6%)의 순으로 응답

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에 따른 증세 필요성과 재정의 부담, 국가경제적 위험요인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려야 한다. 북유럽 국민들은 국민부담률이 40%를 넘어도 정부를 신뢰하며 불평하지 않는다. 내가 낸 세금이 다시 나에게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것과 정부가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점을 경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도 국회와 정부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솔선수범하여 예산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써야 하며,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올려야 한다. 그리고 나서, 증세의 불가피성도 알려나가야 한다.

토 론 문

정 은 상 님
(일반시민패널공모 선정)

복지사회를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발표자: 정은상

주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은상(Steve Jung)

(주)에임스 대표이사
맥아더스쿨 멘토

@stevejung3
stevejung.co.kr
010.5296.3695
stevejung3@gmail.com
macarthurschool.biz



•여기서 국가란 정부를 위시한 입법부와
사법부를 통칭함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청년들은 세계무대로 나가야 하고

•은퇴자는 봉사자로 나서야 한다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

- 국민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 일자리는 국가가 만드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
- 복지예산과 인력을 계속 늘려가는 것
- 고학력자를 양산하는 것

국가가 해야 할 일

- 미래예측을 통해 창조성 인프라 구축
- 핵심 외교인력 양성
- 정년연장과 고령화 대책 수립
- 정치선진화를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것

맥아더스쿨

- 5060세대를 위한 SNS 비즈니스 홍보 코치
양성 프로그램

- www.macarthurschool.biz



국민이 하지 말아야 할 일

-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는 것
- 국익을 해치는 이념 논쟁
- 달콤한 정치인들의 꿈수에 넘어가지 않는 것
-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졸부 근성

국민이 해야 할 일

- 근면, 성실, 정직하게 일하는 것
- 임금양보
- 자원봉사를 생활화 하기
-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기

토 론 문

김 재 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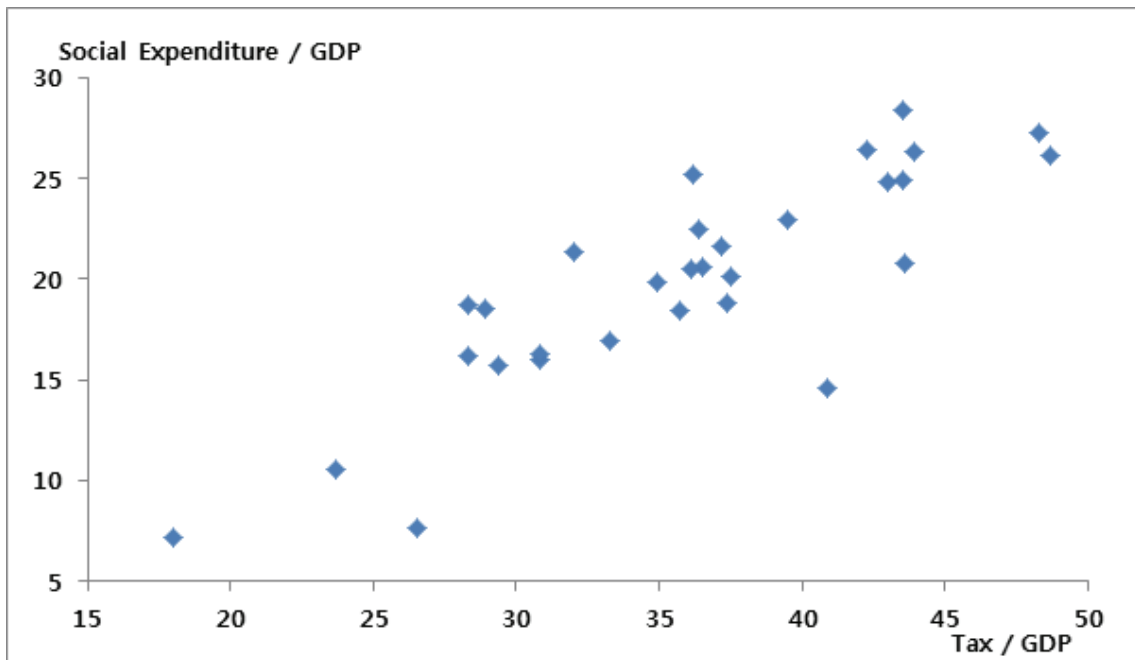
토 론 문

현 진 권 소장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왜 낮은 것일까?

-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이 낮은 이유는 국민부담율이 낮기 때문임.
 - o 국민부담율: 한국은 25%, 스웨덴 45.5%, OECD 평균 33.8%



□ 법인세에 대한 진실

- 법인세율: 한국 22%, 스웨덴 26.3%
 - o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한국, 스웨덴 3.5% / OECD 평균 2.9% (2010년 기준)
- 세계는 법인세율 인하 경쟁 중: 조세경쟁
 - o G7 국가들의 평균법인세율: 1981년 44% -> 2009년 27%

〈표〉 스웨덴 법인세율 변천과정

연도	법정세율
1970	52.6
1971	53.5
1972	54.3
1973-1974	54.4
1975	55.1
1976	55.7
1977	56.1
1978	57.2
1979	57.4
1980	57.5
1981	57.7
1982	57.8
1983	58.1
1984	62.6
1985-1988	57.1
1989	57.4
1990	47.8
1991-1993	30.0
1994 이후	28.0

□ 스웨덴의 진실

- 높은 성장과 잘된 복지가 가능한 것은; 성장을 위한 경제환경 때문임.
 - o 잘된 복지국가이지만, 세금측면에서 가장 불공평한 국가임.
 - o 2005년에 상속세를 폐지, 1990년대부터 이원소득과세제도 실시 (서민소득인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자소득이 자본소득보다 높은 국가)

토 론 문

김 명 훈 박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장)

검 토 의 건

1.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기본방향

- ◇ 장기적으로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한다는 원칙하에 소득중심의 부과체제로 단계적으로 일원화
- ◇ 단기적으로 소득과악의 정도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시행

2.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향 관련

□ 소득중심의 부과체제로 가기위한 전제조건은 소득과악의 정확성임

- 소득과악의 정확성*,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 개념 재정의 (소득종류별 반영방식의 형평성 문제 등**)가 전제되지 않으면, 소득중심 부과체계는 부담능력에 따른 형평적 부과를 담보할 수 없음

* 지역가입자중 소득이 없는 대상이 56%

** 사업소득 경비인정율이 약 80% 수준으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부과대상 소득은 같더라도 생활수준은 다른 상황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가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반드시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님

* 근로·순사업소득 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직장, 지역간 형평성 차이는 더 커지며(보사연, 2011), 외국(일본, 대만 등)의 경우에도 상이한 집단간에는 부과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음

- 부담능력의 가장 좋은 대리변수는 소득이나, 자산도 좋은 대리변수 중 하나이므로, 소득과악정도, 국민들의 제도 수용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부과체계를 개편할 필요

□ 평가소득은 복잡하고 국민에 대한 수용성이 낮으므로, 평가소득의 재산요소는 통합하고, 성·연령기준은 기본보험료 부과로 전환하는 등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

- 단, 기본보험료는 인두세적 성격으로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세심한 제도설계 필요

* 한편, 노인, 여성 등에 대한 기본보험료 부담 완화 등 구체적 형평성을 반영시, 현재의 성·연령점수와 차별성은 거의 없고, 제도의 복잡성을 완화하는 정도의 의의가 있을 것임

3. 재원확보 방안 관련

□ 새로운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며, 조세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동의함

* 프랑스, 독일 등도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준)조세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변화

- 조세의 비중 확대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노동시장 왜곡을 줄이고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며, 안정적인 보험료 재정 확보 가능

* 근로소득 중심의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유발하여 효율성 저해

□ 보다 적극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원조달 방식의 다변화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 재원조달 방식 마련 필요

- 보험료 확충을 위해 근로소득 중심의 보험료를 다양한 소득원(금융·사업소득 등)으로 다원화하고,

- 조세 비중의 증가, 일반회계 국고지원의 한계를 고려한 추가재원 다변화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 검토 필요

토 론 문

신 성 식 대기자
(중앙일보 사회복지전문)

새 정부 복지정책의 과제

중앙일보 신성식 선임기자

취임사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 행복시대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국민도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민맞춤형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 국민들
이 근심 없이 각자의 일에 즐겁게 종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국정과제(보도자료)

- 맞춤형 고용·복지

-출산에서 노령층이 될 때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민들이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한편, 고용과 복지가 긴밀히 연계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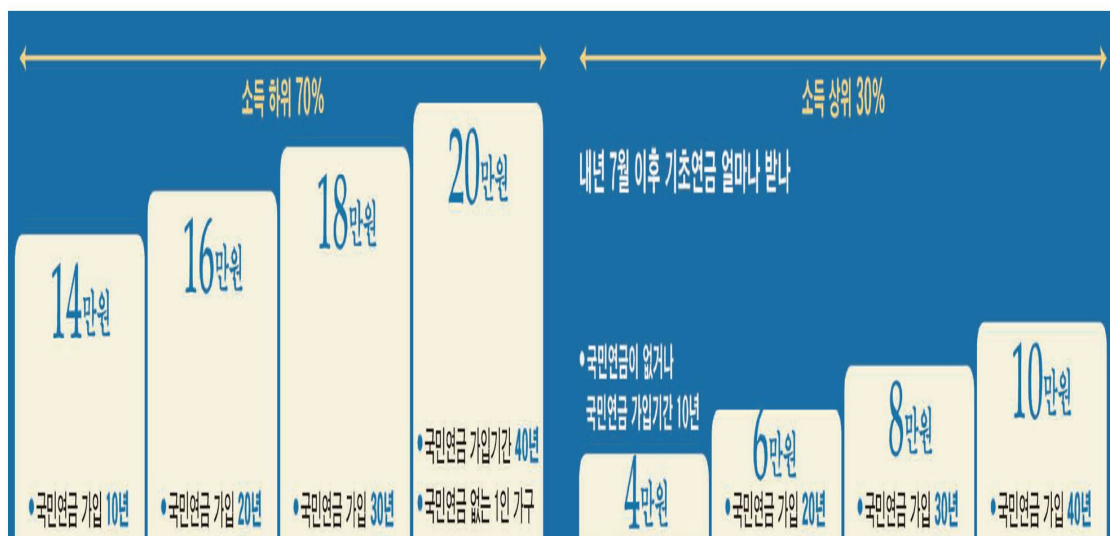
맞춤형 복지/빈곤

- 상대빈곤 도입: 최저생계비(중위소득의 38%)에서 중위소득(4인가구 397만원, 2011)의 50% 이하로 변경. 155만원→200만원, 긴급복지 등 지원 확대 효과
- 개별급여화: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30%, 의료는 그대로, 주거(25만원, 4인)는 40~50%로, 교육 자활은 50%로 조정. 주거바우처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 부양 후 중위소득 생활 유지하도록 완화

맞춤형/기초연금

- 소득하위 70%
20만원-0.2(40-n), n은 가입연수
- 상위 30%
10만원-0.2(40-n)

얼마



평가할 점

- 316만 명 20만원
- 국민연금 장기가입 우대

추가 논의/국민연금 연계

- 소득하위 70% 임의가입자, 자영업자
 - 국민연금 10년 가입=16만4800원+기초연금 14만원, 미가입 20만원
 - 10만4800원 많아/10년 8만9000원 불입
- 일관성 결여
- 재정통합의 불신
- 국민연금 흔들기

추가논의/차등화

- 상위 30% 4만원?
- 10년은 14만원, 40년은 20만원: 빈곤해결에 역행
- 두 달 만에 확정

맞춤형/4대중증의료보장

-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만 중증?
- 사회보험의 원리는 의료비 부담크기
 - 재난적 의료비(소득의 10% 이상) 308만가구로 전체의 20.6%(건보공단 자료)
 - 신부전증 뇌경색 일부 환자만 해당. 9년째 중풍 남편 돌보는 손 할머니. 골절 치매는?
- 전체보장률 63% 대 암 보장률 76%

맞춤형/진료비 상한제

- 현재 200, 300, 400만원 3단계→
최저 120만원, 최고 500만원 7단계로
- 암 혜택은 고소득층이 많아. 최고액 상한
선을 올릴 경우 소득역진 우려. 건보료 기
준 1~10분위 중 1,10분위 순으로 재정 많
이 사용
- 임플란트 건보적용: 2016년 65세로 확대.
틀니도 연령 확대

맞춤형/무상보육

- 0~5세 무상보육, 교육
- 0~5세 무상양육
- 전일제, 반일제 구분 없어
- 0~2세 어린이집 이용자 중 7시간 미만 39
만5959명(2009년) 7000억원 낭비

고용연계/일자리

- EITC 대상을 중위소득의 50%로, 점증구간 점증률 확대, 기초수급자 전면 적용
-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 이원 체계 유지
- 구인-구직자 매칭 시스템 구축
- 사회복지 인력 확충, 시설종사자 임금 인상, 돌봄근로자 처우개선
- 소셜벤처 창업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125만원 미만→130만원, 지원금 3분의1~2분의1→2분의1로
- 10~30인 사업장에도 130만원 미만 근로자 상당수 존재
- 영세 자영업자는?

재원마련

- 예산 삭감, 세출 구조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 복지행정개혁 등으로 131조원 마련
- 기초연금 10조원 증가, 4대 중증질환도 1조원 정도 증가, 노인틀니 증가

부 록

본 연구회 연혁
구성원
토론회 관련 기사('12)

〈연 혁〉

- 2009년 10월 발기인 연구회 설립논의
- 2009년 11월 발기취지문 및 정관 작성. 주 사무실입주
- 2009. 12. 10 창립기념 및 제 1차 토론회 개최 ‘미래한국 복지건설을 위한 친구상’
- 2010. 02. 25 제2차 토론회 성남 신청사 대강당(온누리관)개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과 지역복지발전의 과제’
- 2010. 07. 12 3차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지역밀착형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 2010. 10. 01 제 4차 토론회 성남시청 3층 대회의실,
‘고령화시대 경제성장의 뒷안길에 선 한국 노인들’
- 2010. 11. 25 송파지역아동센터 학습 지도 봉사
- 2010. 11. 29 레인보우 다문화예술단 창단공연 후원
- 2010. 12. 1 성남지역의 다문화가정 현대국립박물관 방문 후원
- 2010. 12. 16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주최
‘경기도다문화가족노래자랑’ 경연대회 협력
- 2010. 12. 25 성남 노숙자 쉼터 ‘안나의집’노숙자 배식 자원봉사
- 2011. 1. 29 『국민희망포럼 한방의료봉사단』과 『선진사회복지연구회』 공동으로
성남 ‘안나의집’ 노숙자 한방치료봉사
- 2011. 2. 17 제 5차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저출산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
- 2011. 4. 24 서울생활협회 체육대회 한방의료봉사단 협력 봉사
- 2011. 6. 14 제 6차 토론회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 2011. 9. 10 성남 노숙자 쉼터 ‘안나의집’ 봉사
- 2011. 9. 11 서울 난곡동 ‘주사랑공동체’ 봉사
- 2011. 9. 27 제 7차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한국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 2011. 10. 2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경기도)
- 2011. 12. 17 송파노인장기요양원 봉사
- 2011. 12. 20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창립 2주년 및 제 8차 토론회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 봉사하는가?—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
- 2011. 12. 24 성남 ‘안나의 집’”봉사
- 2011. 12. 31 서울 난곡동 ‘주사랑공동체’ 봉사
- 2012. 1. 21 ‘안나의집’ 봉사
- 2012. 1. 22 ‘송파구립장기요양센터’ 봉사
- 2012. 3. 9 제 9차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

- ☐ 2012. 6. 29 제 10차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 ☐ 2012. 10. 22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로 승인(제 2012-01-09호)
- ☐ 2012. 10. 25 제 11차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 ☐ 2012. 12. 23 장애인단체 ‘주사랑 공동체’봉사
- ☐ 2012. 12. 25일 노숙자 단체 ‘안나의 집’ 송년봉사
- ☐ 2013. 1. 1 노숙자 단체 ‘안나의 집’ 새해 맞이 봉사
- ☐ 2013. 2. 9 노숙자 단체 ‘안나의 집’ 봉사
- ☐ 2013. 2. 11 장애인 단체 ‘주사랑공동체’ 봉사
- ☐ 2013. 3. 7 사단법인 승인 및 창립 제3주년 축하 토론회 개최

<토론회 개최 연혁>

1. 창립기념 제 1차 토론회 개최

- ☐ 일시 : 2009. 12. 10 오전 11시
-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 주 제 : '미래한국 복지건설을 위한 친구상'
- ☐ 주제 발표 : 강욱모 (국립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토 론 자:
 - o 김병숙 교수(건국대학교행정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o 김창남 교수(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정치학박사)
 - o 조순태 소장(강남성폭력상담소, 한국사회문제연구원)
 - o 정무성 교수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 ☐ 축 사 : 박범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한성디지털대학교 전 총장)

2. 제2차 토론회 개최

- ☐ 일시 : 2010. 2. 25
- ☐ 장소 : 성남 신청사 대강당(온누리관)
- ☐ 주 제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지역복지발전의 과제’
- ☐ 주제발표 : 백종만 학장(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 토 론 자:
 - o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 o 장향만 사무관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지역복지과)

- 이애련 교수 (경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장윤영 도의원 (한나라당)
- 지관근 시의원 (민주당)
- 축 사 :
 - 장석권(전 단국대학교 총장)
 - 김경우 회장(성남시 사회복지연합회/을지대 교수)

3. 제3차 토론회

- 일시 : 2010. 07. 12
- 장소 :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제 :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중심으로’
- 주제 발표: 정무성 원장 (전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 토 론 자:
 - 박현준교수 (연세대학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소장)
 - 김재춘 정책국장 ‘아름다운가게’
 - 정태길 사무국장 ‘함께 일하는 재단’
 - 박찬민 총괄실장(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 윤준현 대표(주)에이스푸드
 - 모동희 대표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 (예비사회적기업)
- 축 사: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 축사문
 - 오세훈 서울시장
 - 이재선 국회보건복지위원장
- 1부 사회 :이승훈 교수 (국제대학교)
- 2부 사회: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 MBC 뉴스 토론회풀영상

4. 제 4차 토론회

- 일시 : 2010. 10. 1
- 장소 : 성남시청 3층 대회의실
- 주 제 : ‘고령화시대 경제성장의 뒷안길에 선 한국 노인들’
- 주제발표: 최성재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사장)
- 토 론 자 :
 - 나임순 교수 (백석대)
 - 신영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 광순현 서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김영진 회장 (성남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 축 사 : 차홍봉 전 보건복지부장관(2013년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 대회장)
- 1부 사회 :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본 연구회 이사)
-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후 원: 성남시,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5. 제5차 토론회

- 일시 : 2011. 2. 17
- 장소 :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 주 제 : ‘저출산대책변화의 함의 와 향후과제’
- 주제발표자 : 이삼식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 토 론 자:
 - 정영훈 과장(대통령직속기관 미래기획위원회 사회복지정책과)
 - 도미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안명옥 이사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17대 국회의원)
 -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 축 사: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 차홍봉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前 보건복지부장관)
 - 오영숙 총장 (前세종대총장)
- 축 가 : 장선주 (바리톤). 이동형 (테너)
- 1부 사회 : 도미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후 원 : 보건복지부, 대통령미래기획위원회, 롯데백화점
- * 언론홍보 mbc뉴스토론회 풀영상, 연합뉴스, 데일리안, 뉴시스, 뉴데일리, 조선일보

6. 제6차 토론회

- 일시 : 2011. 6. 14
- 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제 :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 주제발표: 김용하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토 론 자

- o 김미혜 교수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 o 이기영 단장 (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정책기획 총괄)
- o 우재룡 소장 (삼성생명은퇴연구소)
- o 최용민 (베이비부머해당 토론자 신청공모에서 선정된 일반시민)

☐ 축 사

- o 김성이(前보건복지부 장관)
- o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회장

☐ 오카리나 특별연주 : 오영숙 前세종대 총장(본 연구회 고문)

☐ 1부 사회 :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 실버학과)

☐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후 원 : 삼성생명, 한국경제신문

*** 언론 홍보 :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 뉴시스 및 6개 언론사 기사 게재

7. 제7차 토론회

☐ 일시 : 2011. 9. 27

☐ 장소 :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제 : '한국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 주제발표 :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 토 론 자

- o 박용오 사무총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o 홍백의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o 김재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
- o 장상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전무)

☐ 축 사 : 심윤중(前 성균관 대학교 총장/국민희망포럼 이사장)

☐ 1부사회 : 박서영 교수 (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2부사회 :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본 연구회 이사)

☐ 후 원 : SK사회적기업지원단

*** 언론 홍보 : 뉴시스 및 연합 등 5개 언론사 기사

8. 창립 2주년 기념 및 제8차 토론회

☐ 일시 : 2011. 12. 20

☐ 장소 :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제 :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 봉사하는가?—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

☐ 주제발표 : 강철희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 토 론 자

- o 강학봉 (사회공동모금회 사업본부장)
- o 임혜성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장)
- o 광대석 (CJ 나눔 사무국장)
- o 김현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회장)
- o 안명옥 (전국회의원/나눔공동체)

☐ 축 사

- o 차홍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본 연구회 고문)
- o 김원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
- o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본 연구회 고문)

☐ 추가 : 소프라노 이윤순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 'Memory'(추억), <캣츠>

☐ 1부 사회 : 석말숙 교수(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선진사회복지연구회)

☐ 후원 : 보건복지부, IBK기업은행, CTS기독교TV

*** 언론홍보 : 연합 및 언론사 6기사보도

9. 제9차 토론회

☐ 일시 : 2012. 3. 9

☐ 장소 :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제 :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

☐ 주제발표 : 홍경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토 론 자

- o 박미출 (일반시민토론자 신청공모자에서 선정)
- o 허준수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숭실대 사회복지학과)
- o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장)
- o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본 연구회 이사)
- o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 축 사

- o 조성철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o 박인복 회장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 o 구본홍 사장 (CTS 기독교TV)
- o 최란 이사장(대한민국 서울문화예술협회)

☐ 1부 사회 : 나임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후 원 : 고용노동부, CTS기독교TV

☐ 협 찬 : 대구은행

*** 언론 홍보 : 연합, 뉴시스 및 5개 언론 기사

10. 제10차 토론회

- ☐ 일시 : 2012. 6. 26 오후 2시
 - ☐ 장소 :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 주 제 :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 ☐ 주제발표자 : 이 준 영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토 론 자
 - o 신인석 교수 (중앙대 경영학과)
 - o 이의영 교수 (경실련 전 상집위원장/ 군산대 경제학과)
 - o 김광기 경제선임기자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
 - ☐ 축 사
 - o 심윤중 총장 (前 성균관대학교 / 국민희망포럼 이사장)
 - o 임성택 총장 (그리스도대학교)
 - ☐ 1부 사회 :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실버복지학과/본 연구회 이사)
 - ☐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미래정책연구원
- ***언론 홍보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

11. 제11차 토론회

- ☐ 일시 : 2012. 10. 25 오후 2시
- ☐ 장소 :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 주제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 ☐ 주제발표자 : 신영석 부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토 론 자
 - o 김동섭 조선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 o 이준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 o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 o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 o 김선희 한노총 사회정책국장
 - o 윤철수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 ☐ 축 사
 - o 김정례 (전 보건복지부 장관)
 - o 유양근 (부총장/ 본 연구회 고문)
- ☐ 1부 사회 : 나임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 후 원 : 홈플러스

〈임원진〉

□ 고 문(5명)

차홍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前 보건복지부장관
 장석권 前 단국대 총장
 오영숙 前 세종대 총장
 박범진 미래정책연구소이사장/前 한성디지털대학교 총장
 유양근 강남대학교 부총장

□ 회 장 : 이정숙

□ 감 사 : 이현용 변호사 , 신용우 미국공인회계사/ 한국유스호스텔 사무총장

□ 이 사: (20명)

김갑재 사)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부총재
 김선근 변호사
 김혜숙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구혜영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나임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도미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박서영 교수 (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재운 세무사
 백세균 회장 (사)경기도 장애인정보화 협회)
 박주현 교수(백석문화대 사회복지학과장)
 서호석 한의사(국립중앙의료원 한방내과 과장)
 석말순 교수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육수기 교수(남서울대 강사, 전 경기도 노인복지관협회장)
 이득수 부국장(언론사 편집부국장)
 정천석 소장 (한국다문화가정 연구소/경원대 교수)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실버복지학과/성남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조중근 교수 (장안대학교/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
 최석만 교수 (세종대학교 디지털 정보학과)
 함용석 회장 사)사회복지심리사협회
 허숙희 원장 (학동어린이집)

□ 사무총장 : 이자형 경제학박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간 사 : 김은경 복지전공 박사과정

□ 운영위원(8명)

박경희 (수필가) , 성은제 교육학박사 (명지대 청소년 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엄혜진 (자영업), 조금산 (도서관 근무), 이영숙 주부, 최승희 (회사원)
 윤희한 지역아동센터장, 정윤경 말샘/글샘언어교육연구소 대표

〈토론회 관련 언론 기사〉

NEWS ()
[뉴스시스아이즈]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시민이 관심 가져야 복지국가 된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618_0011201273&cID=11203&pID=11200

기사등록 일시 [2012-06-18 15:28:08]



【서울=뉴스시스】 이득수 기자 = 복지문제는 경제민주화 청년실업 문제와 함께 연말 대선의 승패를 가를 핵심 이슈로 꼽히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경쟁적으로 복지 확대를 주장하며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과연 국가재정의 능력으로 감내해낼 수 있는 것인지, 지속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은 없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걸맞는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긴 하지만 안보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시급한 부문에 배정해야 할 한정된 자원을 복지에 쏟아 붓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혁, 좌우 이념에 따라 주장은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민간단체인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중도적 입장에서 복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 탐구를 전개해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작은 단체이지만 매년 3~4회의 토론회를 열어 복지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며 콘텐츠를 축적해오고 있다. 26일엔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이준영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중앙대 경영학과 신인석 교수, 경제정의실천연합 이의영 상집위원장, 중앙일보 신성식 선임기자 등이 토론자로 나와 질의응답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연구회를 설립해 3년째 이끌고 있는 이정숙 회장을 만나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문제와 바람직한 방향을 비롯해 그의 복지관을 들어봤다.

- 선진사회복지연구회를 설립한 취지는?

“우리 사회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소득양극화 현상의 심화, 고용없는 성장 등으로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지만 한정된 재정으로 이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연구회는 2009년 10월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우리나라도 선진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창립했다. 이념을 초월하고 정파를 떠나서, 또 복지의 전문가 비전문가, 종사자 비종사자 등 복지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본 연구회에 구성원이 되어 선진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자며 출범했다. 그동안 꾸준히 우리나라 복지현안에 대해 고민과 정책대안 모색의 장을 마련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회의 이런 작은 몸짓이 나비효과랄까? 복지는 일부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해당되는 정책이라 여겨졌던 것이 국가 중요어젠다로 떠오르며 그 수혜대상자도 중산층까지 확대 될 정도가 되었고 온 국민이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시작했다.”

- 연구회가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의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 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음부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이자 목표이다.

또 우리나라 복지 현안에 대해 토론회를 통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고민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토론회가 끝난 후엔 발표 자료를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토론회시리즈’로 매주 7200명에게 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그게 벌써 42회까지 나갔다. 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카페, 학회에도 올려 토론회 당일 시간을 못 내어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복지현안에 대해 공부하고 관심을 갖도록 귀한 토론 자료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

- 이 회장께서 생각하는 ‘선진사회복지’란?

“최근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신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홍보차 내한해 한 대학의 노천극장에서 열린 강의를 한 적이 있어 참석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공부를 하게 한 강의였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즉 돈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 되고 이루어지는 사회가 돼 가는데 우리 인간의 가치, 규범, 도덕, 꿈과 희망은 기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에 의해, 또 돈에 의해 박탈돼서는 안 되게 하는 것이 이상적 복지, 선진복지국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됐다.”

- 정부의 복지정책과 총선에서 앞 다투어 내놓은 복지공약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나라 2012년 내년 총지출예산 326조1000억원 중 28.2%인 92조원이 복지예산이다. 또 (2000~2007)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연 평균 14.2% OECD 국가 평균 6.3% 대비 2.3배 높다. 수치상으로는 분명 복지국가 반열 초입에 들어섰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2007년)은 아직도 GDP대비 8.1%로 OECD 평균(19.8%)에 비하면 더 확충해야 한다.

국민들의 복지체감온도가 낮은 편인데 이는 복지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효율성에 대한 문제와 13개 부처에 걸쳐 230여개의 복지프로그램이 부처간 칸막이 현상으로 연계성과 통합성이 낮아 중복이 되거나 누수가 되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무엇보다 사회복지사들이 인력 부족으로 현장 방문점검이 제대로 안 되는 전달체계상에서의 문제가 무엇보다 심각하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각 당, 각 지역 국회의원들이 복지와 관련해 많은 정책을 내놓았다. 실천이 문제다. 가급적이면 꼭 실천해야 한다. 만약 그 당시 한 표가 아쉬워 비효율적이고 지속 가능성이 없는 정책을 공약했다면 솔직하게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정치인, 정치권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고 변명을 하기 때문이다.”

- 최근 사회복지계를 중심으로 한국형 복지 찾기가 한창이다.

복지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것이다. 현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를 돈으로 다 해결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 퍼주기만 한다면 도덕적 해이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 자활자립 할 수 있게 재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재임 8년간 일자리 1600만개를 창출하고, 2800만명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린 업적 때문에 지난해 말 퇴임하면서 지지율이 87%에 달했다. 그 비결에 대해 “정치가 뭐냐고요? 어머니의 마음이죠”라고 답변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도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성을 가지고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미래를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 복지에 대해 논리나 말의 성찬이 무슨 소용 있겠는가? 성장이 먼저냐 분배 즉 복지가 먼저냐를 따지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사회가 돼야 한다. 선진복지국가의 모델인 스웨덴도 복지를 아주 성공적으로 실현하면서도 5.5%의 성장을 이루는 것을 보면 투명한 사회, 신뢰의 정치,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복지문제가 심각하다. 해법을 조언 한다면?

“우리나라는 2010년 인구 11%가 노인인구로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거기다 작년부터 은퇴가 시작된 712만명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있다.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노인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 중에 건강문제가 43.6%, 경제적 어려움이 38.4%(2008년 통계청)로 나타났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노인의료비 점유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경륜을 가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노인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노후준비교육 등을 통해 은퇴 후 삶을 노인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령자 재취업, 자원봉사, 여가활동 등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했는데....

“이태백, 사오정, 삼포시대, 허니문푸어, 하우스푸어 등 수많은 신조어는 고용의 질과 양의 불안에서 생겼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2.2%로 치솟았고 켄거루족, 신 켄거루족을 양산하고 있다. 이들의 좌절, 분노, 자포자기는 자살과 사회에 대한 불만과 적개심으로 표출 되어 사회불안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고용과 복지는 상호보완성을 가지고 있는데 노동시장의 소득배분과 복지를 통한 재분배가 상호보완성을 가지고 작동할 때 보다 나은 사회경제적 성과를 산출한다고 한다. 이런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창업지원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과 복지 격차를 해소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본다.

-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 보는지?

“정치권에서는 헌법 119조를 근거로 여야가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으로 채택하고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경제민주화가 돼야만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복지는 거시적인 경제정책이고 경제민주화는 미시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분도 있다.

그동안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께서 제기한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논의는 다소 있었지만 정작 복지학 측면에서 경제민주화를 논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연구회에서는 지난 2월부터 복지 측면에서 경제민주화를 바라보고자 26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토론회를 가지려 한다.

leeds@newsis.com

※이 기사는 뉴시스 발행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즈 제282호(6월25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2012년 3.9분 연구회 주최 토론회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

관련 언론 기사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80342



"고용친화형 복지국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선진사회복지연구회, '복지와 고용이 함께가는 복지국가' 토론회조성완 기자 (2012.03.13 20:36:43)

◇ 선진사회복지연구회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를 열고 있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제공

4·11총선을 앞두고 복지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복지와 고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돼 상호보완성을 가져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탈공업화와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현실에서 복지 없는 고용은 불가능하다”면서 “복지가 고용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용친화적 복지가 돼야 하며, 고용 또한 복지 친화적 고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란 노동시장을 통해 이뤄지는 소득의 배분과 복지를 통해 이뤄지는 재분배가 상호보완성을 갖고 작동하도록 복지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복지가 총선과 대선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 확실시되자 복지와 고용의 융합을 말하는 사람도 늘어났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의 중핵이며 납세자인 다수의 임금근로자와 자영근로자를 포괄하는 복지여야만 진짜”라고 강조했다.

이정환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과장도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하는 고용친화형 복지국가는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 중 하나이며, 우리사회의 도전과제를 고려할 때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고 힘을 실었다.

이 과장은 해결방안으로 고용을 중심으로 한 일을 통한 복지, 노동시장참여형 복지 체제를 구축해 재원 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하는 가칭 ‘고용주도형 복지국가 모델’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허준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은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 및 국민의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위원장은 “중앙정부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제도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가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기업측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리후생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비정규직의 양산과 과도한 사내하청의 증가 등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노동시장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 조성완 기자]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8546>



총선 앞두고 "복지 제대로 알자"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선심성 복지정책 경계해야”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 박기환 국민대 교수 등 학계서 복지정책 토론
이정숙 회장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 고려해 복지정책 펼쳐야..."

- 최종편집 2012.03.09 00:25:12
- 윤희성 기자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9일 오후 2시 광화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를 발표하고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장, 박기환 국민대 경영대학 교수,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이상적인 복지는 없지만 합리적인 복지는 있다고 빔 록 네덜란드 총리가 말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복지정책을 토해내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은 정치인들 스스로의 입지를 위태롭게 만든다”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선거가 끝난 뒤 남발된 복지정책은 시민의 분노로 돌아와 정치인들은 바로 응징 받게 돼 있다”며 “각 정당은 모두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은 생각하며 복지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기념해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박인복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8627> 뉴데일리(2신)

퍼주는 데 정신없는 현실정치

선진사회복지연구회 “복지, 제대로 접근해야...”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학술포럼 개최

학계, 행정가, 연예계 인사 등 모여 복지정책 논의

- 최종편집 2012.03.10 00:23:57
- 윤희성 기자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토론회 참여자 왼쪽부터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 본부장,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미출 일반시민토론자, 이정숙 회장,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기환 국민대 경영대학 교수,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과장.

지난해 무상급식 문제가 복지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겹치면서 복지 관련 공약들이 각 정당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쏟아져 나오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장밋빛 공약들이 과연 실행 가능한 것들일까? 또 복지공약이 이름처럼 모든 서민에게 고른 혜택을 나눠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와 관련,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는 9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긴급 토론회를 주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를 주제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숙 회장은 “4·11 총선을 앞두고 여, 야 할 것 없이 모든 후보들이 일자리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를 무조건 기대하고 환영할 수는 없다”며 “재정은 한정되어 있어 국민부담 세금을 올리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 많은 예산을 감당할지 염려가 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와 노동시장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사고해야 진정한 복지가 가능하다”며 “민간기업,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진정한 복지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재원은 세금으로부터 온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시장에서 1차적으로 분배되는 것도 복지의 한 부분이고 1차 분배가 진행된 뒤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의해서 다시 조정되는 것이 진정한 복지지, 가난한 사람만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복지는 소수의 복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홍 교수는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간다는 것은 복지의 원천이 노동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사람들의 소득이기에 고용 없는 복지는 존재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과장은 “서구유럽의 복지국가는 경제 성장이 최고의 위치에 올랐을 때 논의됐던 것으로 우리의 사회, 경제체계의 수준에서는 성급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현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복지비용도 높고 미래를 대비해 통일비용으로 만들어 뒀던 국고의 여유분을 복지수준을 높이는데 모두 다 쓴다는 것은 고민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최 란 대한민국 서울문화예술협회 이사장과,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축사를 하며 자리를 빛냈다.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 이룩해야”

기사등록 일시 [2012-03-09 18:35:07]

【서울=뉴시스】 이득수 기자 = ‘복지와 고용이 함께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이룩할 수 있다’는 명제 하에 양자의 동시 실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홍경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허준수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용노동부 이정한 노동시장정책과장, 국민대 경제학과 박기환 교수,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왔다.

홍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탈공업화와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현실에서 복지없는 고용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좌절에 빠진 우리 국민을 다시 희망이라는 기차에 태우기 위해서는 복지가 고용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용 친화적 복지가 돼야 하며, 고용 또한 복지 친화적 고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과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란 “노동시장을 통해 이뤄지는 소득의 배분과 복지를 통해 이뤄지는 재분배가 상호보완성을 갖고 작동하도록 복지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교수는 “복지가 총선과 대선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 확실시되자 복지와 고용의 융합을 말하는 사람도 늘어났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한다”며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의 중핵이며 납세자인 다수의 임금근로자와 자영근로자를 포괄하는 복지여야만 진짜”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부에서 복지와 고용이 함께가는 복지국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복지 거버넌스(공공행정)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박미출(일반시민 대표)씨는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년실업이 사회와 정부에 대해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용을 가로막는 주범은 재벌이라고 규정했다. 재벌이 중소기업 고용유증을 침탈해 재벌 일가의 배를 채우느라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을 희생

시키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박씨는 또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복지예산으로 취업학원과 직업전문학교에 국비지원을 하고 있으나 교육내용이 형편없다며, 즉시 지원을 중단시키고 취업전문 기관을 대학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준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은 토론에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 및 국민의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제도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기업측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리후생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비정규직의 양산과 과도한 사내하청의 증가 등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노동시장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이정환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과장은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하는 고용친화형 복지국가는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 중 하나이며, 우리사회의 도전과제를 고려할 때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가 공공복지에 대한 요구급증,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새로운 성장동력 요구 등 우리사회가 처한 여러 도전과제들을 나열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고용을 중심으로 일을 통한 복지(Workfare), 노동시장참여형 복지(Activation) 체제를 구축해 재원 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 하는 가치 ‘고용주도형 복지국가 모델’을 제시했다.

leeds@newsis.com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309153414791&p=yonhap> 연합뉴스 (1신)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9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로 열린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 토론회에서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 2012.3.9 jihopark@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547246> 연합뉴스 (2신)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 토론회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2-03-09 15:32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9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로 열린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 토론회에서 시민 박미출씨가 토론을 하고 있다. 2012.3.9

jihopark@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547245> 연합뉴스 (3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547247> 연합뉴스(4신)

<http://www.bokjineews.com/>  복지뉴스

“배분개선 없는 복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경제 세계화 현실서 복지 없는 고용은 불가능

복지와 고용 유기적 결합된 친화적 정책 필요

고용확대 막는 우리경제 모순해결은 ‘재벌해체’

시장경제에서 이뤄지는 1차 배분구조의 개선 없는 복지는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9일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홍경준 교수는 “탈공업화와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현실에서 복지 없는 고용은 불가능하다”

고 지적했다.

따라서 좌절에 빠진 우리 국민들을 다시 희망이라는 기차에 태우기 위해서는 복지가 고용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용친화적 복지가 돼야하며, 고용 또한 복지친화적 고용이 돼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홍 교수는 또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새로운 복지국가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 뒷받침과 복지 거버넌스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는 정치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경제적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성장이 필수적이다. 성장은 보편적복지의 지속 가능성에도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일례로 베버리지의 보편적복지를 대표하는 영국의 공적연금제도는 저성장 때문에 연금급여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없어 대부분의 중산층을 민간연금으로 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성장은 지금까지의 성장과는 다른 토건과 물적자본 위주의 성장이 아니라 인적자본과 지식자본의 축적에 기초한 생산성주도 성장, 혁신 중심 성장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홍 교수는 또 복지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서는 협소한 복지 개념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에게 요구되는 복지는 대외 경제환경의 불완정성을 완화할 수 있는 내수 창출 정책이어야 하며 고용 불안정을 억제하는 고용창출 기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연령층이 빈곤에 빠지기 전에 개입해 경제 재도약의 동력을 보존하는 미래대응적인 것 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일반 시민 토론자로 나선 박미출 씨는 고용 확대를 가로막는 우리경제 모순구조 해결의 지름길은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씨는 “재벌 일가의 가족 구성원인 고위 임원 1명의 연봉이면 근로자 수 십 명을 고용하고도 남음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게 해당 기업에게도 이익이 됨을 잘 알면서도 재벌들은 가족을 늘리면서 엄청난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박 씨는 “공기업에서 정년퇴직한 사람이 아파트 경비직에 취업을 해 2교대 근무를 하고 받는 임금과 일하지 않고 쉬면서 받는 실업수당 중 실업수당이 더 많은 금액이라는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지한 고민 없이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양산 된 위정자들의 복지정책이 낡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일갈했다.

또 “정부의 복지정책 관계자들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당연한 현상으로써의 복지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복지는 국가가 국민에게 베푸는 혜택’이라는 대단한 착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씨는 “복지는 결코 혜택이 아니라 구성원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며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허준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은 “중앙정부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제

도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 위원장은 또 “정부중심의 거버넌스를 지양하고 지역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고용과 복지를 통합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의 구축도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지역공동체, 나아가서 복지국가로 향해가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snlibo.co.kr/sub_read.html?uid=24130



성남일보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정책 토론회 연다

3월 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송명용 영상기자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는 오는 3월 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홍경준 교수(성균관대)의 주제발표에 이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 본부장, 이재홍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부서장, 허준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송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미출씨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07/2012030700030.html

chosun.com

조선일보플라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378741)

378741 뉴시스 오늘의 일정



선진사회복지연구회, '나눔과 봉사 토론회' 성료

'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

강철희 교수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적게 기부"

- 최종편집 2011.12.21 16:08:20



내년 총선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복지 문화에 대한 토론장이 마련됐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봉사하는가?-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원길 한국여자농구연맹총재(전 보건복지부 장관)와 차홍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이 축사를 하고 소프라노 이윤순씨가 축하를 불렀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은 "'선진사회복지연구회' 2주년 기념을 겸한 올해 마지막 토론회다. 연말을 맞이하여 평소보다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는 시기이므로 기부, 후원 및 나눔과 봉사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부 금액과 기부 빈도는 부유층이 더 많이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부유층이 높은 소득수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를 기부하고 있어 기부 노력도가 낮다”고 밝혔다.

강 교수에 따르면 2008년 국세청 통계 기준 소득 수준별 개인 기부에서는 소득 상위 90%대(최상위 100%) 부유층의 기부 노력도가 가장 낮고, 소득 20%대의 하위계층의 기부 노력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 노력도란 소득 수준 대비 기부금 비율로, 소득 20%대의 기부 노력지수는 0.79, 소득 90%대 부유층의 기부 노력지수는 0.47이었다.

강 교수는 부유층의 나눔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부유층의 향후 기부의향이 98.5%이고 이들이 기부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설명과 보고를 바란다"며 부유층 나눔 모형 개발, 계획기부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계획기부란 현금, 부동산, 보험 등 여러 형태의 자산을 기부하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기부형태로서 기부자가 자신의 자산운용과 향후 계획을 수립해 기부를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학봉 사회공동모금회 사업본부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나눔단장, 안명옥 전 국회의원, 광대석 cj 나눔 사무국장, 김현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광대석 CJ 나눔&문화재단 사무국장은 "사회복지 수요 확대를 충당하기 위해 민간복지자원이 중요하다"며 민간재원의 핵심인 기업은 2010년 약 3조 원 가량을 사회공헌활동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광 국장에 따르면 기업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은 단체나 지역사회에 현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자원봉사나 회사제품 기부, 회사 보유시설의 개방·공유 등 다양하다. 광 국장은 그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활동이 '자원봉사'라고 말했다. 2010년 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전체 직원의 76%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기업이 43.2%나 된다.

광 국장은 “사회공헌활동은 일방적인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기업 역시 유·무형의 이익을 본다”며 시민, 기업 그리고 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선진사회복지연구회 나눔봉사 토론회

우리나라의 GDP대비 기부금 규모가 0.8%에 불과하다고 알려진 가운데 기부현실과 앞으로의 바른 기부문화 형성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창립 2주년을 맞아 진행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강철희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이 높을 수록 평균기부금액은 높지만 소득에서 기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며 "고소득자의 기부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주식과 부동산, 유산 등 유무형의 자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안 마련과, 나눔의 가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재능기부를 통한 기부효율성 증대 방안 등 나눔의 주체를 다양화하고 기부문화를 확대해나갈 수 있는 방법 등이 논의됐습니다.

최기영 기자

- Copyrights © CTS기독교TV. <http://www.cts.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선진사회복지연구회, 20일 나눔 토론회

기사등록 일시 [2011-12-15 09:31:44]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봉사하는가?-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강학봉 사회공동모금회 사업본부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나눔단장, 안명옥 전 국회의원, 곽대석 cj 나눔 사무국장, 김현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특히 이날 김원길 한국여자농구연맹총재(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홍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이 축사를 하고 소프라노 이윤순씨가 축하를 부른다. shoon@newsis.com



소득 상위 10%대 시민 기부노력 “꼴찌”

기부노력, 하위 20%대 시민 0.79 vs 상위 10%대 시민 0.47

강철희 교수 “상징적 수준의 부유층에 의한 나눔 촉발” 촉구

우리나라의 개인기부금 규모가 17조원으로 추계되는 가운데 소득 수준 상위 10% 시민의 기부노력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일 프레스센터에서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봉사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창립2주년기념 제8차 토론회에

서 이같이 밝혔다.

강철희 교수에 따르면 세분화된 기부처별 기부금 서베이 분석결과 종교포함 개인기부금 규모는 2009년 총 17조4940억원으로 추계된다. 이는 GDP의 1.65%에 이른다.

강 교수는 “그러나 소득계층별로는 소득 수준이 높은 시민의 경우 특히, 소득수준 상위 10% 시민의 기부 노력 정도가 가장 낮았다”고 주장했다.

소득 수준별로 기부노력의 정도는 소득수준 하위 20%대 시민이 0.79%p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하위 40%대는 0.65%p, 하위 60%는 0.57%p, 하위 80%는 0.48%p였으며, 하위 90% 즉, 상위 10% 시민은 0.47%p로 기부노력의 정도가 가장 낮았다.

반면 미국의 경우 전체 기부규모 중 개인 75%, 재단 13%로 개인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 기부 중 상위 1~5%에 속하는 부유층의 나눔의 몫은 35~50%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는 등 이들에 의한 기여가 절대적이다.

강철희 교수는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부유층에 의한 모범적 모형의 실재를 관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미국과 같이 상위 부유층 1%에 의한 개인 나눔규모 중 35%까지의 기대는 가능하지 않으나 일정한 상징적 수준의 부유층에 의한 나눔 촉발이 발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의 나눔행동은 계층간 사회적 거리의 간극을 좁히고 사회자본의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교수는 또 기부 활성화를 위해 ▲부유층 나눔모형의 개발과 촉진 ▲유산기부의 확대 및 계획기부 추진을 위한 제도 도입 ▲정기적 나눔 실천 및 나눔교육의 제도화 ▲세금혜택 등 관련된 제도적 유인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강학봉 사회공동모금회 사업본부장도 개인기부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최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이 확대된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확대됐으며,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 또한 확대돼 나눔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확대와 더불어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의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세법상 용역기부를 자원봉사 등에 확대하는 등 물질적 나눔 뿐만 아니라 재능 또한 나눌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이 도입된다면 일대 전기가 되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은 “여론조사에서 58.3%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을 바라고 있다”면서 “기부문화가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에서 더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나눔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부단체의 자금운영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길 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는 “기부문화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 할 때 아직 세상이 더 살만하다는, 더 노력해 볼만 하다는 느낌을 갖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영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고문은 “한국의 기부는 미국의 2.2%에 비해 0.8%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국세통계연보에는 개인기부와 법인기부를 합쳐서 볼 때 증가 추세라는 점에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과 자아실현 및 시민의 사회적 책임을 가짐으로 사회 통합이 가능하다”며 “국민 개인 한 사람 한사람이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피력했다.

오 고문은 “나눔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기부문화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명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은 “나눔운동은 착한 마음으로만 하기보다 전략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체계를 갖추어 하면 끊임없이 계속돼 확산되는 운동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기증하고 자원봉사를 할 의사는 있는데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방법을 시스템화해 물 흐르듯이 원하는 사람은 다 나눔공동체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범사회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장은 “나눔확산을 위해 생활 속의 쉬운 나눔, 사회적 인정 강화, 노블레스 오블리주 확산, 모금 기관의 신뢰성 제고, 나눔국민운동 전개 등 5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그간의 나눔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추진할 나눔정책은 ▲나눔의 제도화 ▲생활 속의 나눔문화 확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나눔환경 구축 등이다.

한편 광대석 CJ 나눔&문화재단 사무국장은 상생과 나눔을 위해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광대석 사무국장에 따르면 사회복지 민간재원의 핵심인 기업은 2010년 약 2조8735억원이 사회공헌활동 예산으로 사용됐다. 이는 전년대비 8.4%가 증가했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이 직접 참여한 실적은 2008년 45%를 차지했던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이 2010년에는 총액 7513억3900만 원 중에서 51.1%인 3842억3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광 사무국장은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사차원의 봉사조직, 표창제도, 봉사자 등록제도, 휴가제도, 교육프로그램 등을 도입해서 기부와 나눔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기업들의 나눔과 기부활동의 외부저해요인으로 사회적 인식부족(26.4%), 반 기업정서 등 외부의 왜곡된 시선 및 보도(24.8%)가 전체의 51.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정부의 제도적 지원 부족(22.9%),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외부의 압력과 요구(18.4%), 법제도의 문제점(6.6%), 기타(1.0) 등으로 나타났다.

곽 사무국장은 “이러한 조사를 분석해 보면 기업의 나눔과 기부활동에 대한 시민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평가 그리고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이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블로그/이메일] 등록일:2011-12-20/수정일:2011-12-23



선진사회복지회,나눔 주체 토론회 개최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누가,어디에 기부하고 자원봉사하는가'- 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강철희 교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가 주제발표를 한 후 강학봉 사회공동모금회 사업본부장,임혜성 보건복지부 나눔정책국장,곽대석 CJ나눔 사무국장,안명옥 전 국회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시사in저널

뉴스시스아이즈]이슈진단 **NEWSisEYES**

'기부문화가 세상을 바꾼다'-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 확산 불구 아직 미미

기사등록 일시 [2012-01-09 09:08:44]

서울=뉴스시스】이득수 기자 = 역사 저술가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제국이 1000년이라는 장구한 기간 존속할 수 있었던 힘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에서 나왔다고 그의 세계적 베스트 셀러 ‘로마인 이야기’에서 갈파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유럽에서 귀족들이 부와 특권을 향유하는 것만큼 사회와 국가를 위해 도덕적 의무를 다한다는 의미이다. 귀족계급이 사라진

현대에는 사회 지도층이 자신들이 누리는 것만큼 사회에 봉사하고 환원하는 행위를 뜻한다.

유럽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미국으로 건너가 꽃을 피웠다. 카네기, 록펠러 등 대부호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해 설립한 비영리 자선사업 재단은 오늘날 미국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이행과 공헌의 상징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록펠러 재단과 카네기 재단은 기아문제 해결은 물론 학문과 문화발전, 신흥국 원조에까지 활동영역이 광대하다.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와 그의 부인 멀린다는 ‘빌 &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 저개발국가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세계 최고 부자의 한 사람인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은 빌 게이츠와 함께 억만장자들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공익재단에 기부하자는 운동인 ‘기빙 플레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여기엔 블룸버그통신을 만든 뉴욕시장 마이클 블룸버그와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등 미국의 부자 기업인 7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버핏은 개인재산 580억 달러 가운데 절반이 넘는 300억 달러를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한 바 있다. 버핏은 “부자들의 돈은 사회에 돌려줘야 할 보관증”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부자들이 시장 경제 체제에서 더 많은 혜택과 과다한 몫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있던 사회로 되돌려줘야 한다는 의미이다.

미국에는 5만6000여 개의 자선재단이 있으며, 미국인들의 98%가 기부에 참여한다. 이처럼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부문화가 폭넓게 뿌리를 내려 생활화하고 있다. 총 기부액의 77%가 소액기부금이다.

매년 연말이면 구세군 자선냄비와 종소리는 거리의 연말풍경을 연출한다. 경기가 침체해 먹고사는 문제가 팍팍해진 올해에도 자선냄비를 통한 얼굴 없는 천사들의 기부가 매스컴을 장식했다. 지난달 4일에는 거리의 모금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1억1000만원짜리 수표가 나와 신문과 방송에 대대적으로 소개되며 세상을 놀라게 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90대 노부부가 1억원짜리 수표 2장을 구세군본부 본영을 찾아와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전달했다.

전주 노송동에서는 2000년 이후 12년째 얼굴 없는 천사가 찾아와 5024만2100원을 맡기고 사라졌다.

이러한 익명의 기부자들로 인해 세상살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나눔으로 서로 감싸며 희망을 잃지 않게 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국세청의 세액공제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2008년 기준 총 기부금액은 8조9100억원으로 2001년 4조6700억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연말소득공제 자료를 통해 파악한 1999년 기부금 총액이 2조9000억원이었으므로 10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GDP 대비 총 기부금액의 규모는 0.8% 정도로 미국의 2.2%에 비해 아직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최근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가 창립2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토론회 ‘누가 어디에 기

부하고 자원봉사 하는가?’에서 주제발표를 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강철희 교수가 밝힌 내용이다.

강 교수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개인기부금 총액은 0.54%로 미국의 1.67%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았으나 영국 0.73%, 호주 0.65%에는 상당히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과 기업의 기부금 비율은 60대40이다. 미국이 95대5로 개인 기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과 비교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일반 시민들의 기부문화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종교별로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순으로 기부참여율과 평균 기부 금액이 높았다. 기부자들은 기부금의 사용 희망 분야를 ‘자선 및 사회복지 분야’ ‘지역사회 발전’ ‘의료분야’ ‘해외구호활동’ ‘교육및 연구활동’ 순으로 꼽았다.

강 교수는 2009년에 실시한 ‘부유층의 기부 관련 연구’ 결과도 발표했는데, 이 조사는 유동자산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부유층 68명을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 방식으로 수치를 얻어냈다. 이 가운데는 자산 50억원~1000억원대를 보유한 부자도 포함돼 있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부유층들은 기부의 의미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것이라는 답변(복수 답변 허용)이 63.6%로 가장 많았고, ‘개인의 가치 및 자아 실현’(50%), ‘사회정의 및 사회통합 수단’(39.4%) 순으로 답변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기부를 경험한 이들은 전체의 95.5%로 대부분 기부를 해본 사람이 참여했다. 가장 보편적인 기부처는 자선단체 및 사회복지기관(88.9%), 교육기관(33.3%), 이웃(28.6%), 정치단체(23.8%)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3년 동안 평균 1억1500만원 정도를 기부했으며, 향후 기부를 계속할 의사가 있고, 유산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도 약 10%였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기부행위 의미를 ‘사회적 책임 이행’과 ‘개인의 가치 및 자아실현’ ‘사회정의 및 사회통합 수단’ 순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부자들의 기부행위가 일상화하고, 동기 자체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개인들의 기부금액이 국가 전체의 기부금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미국의 경우 전체 기부규모 중 개인이 75%, 재단이 13%,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이 7%를 차지해 개인의 비중이 거의 대다수이다. 개인 기부 중에서 상위 1~5%에 속하는 부유층의 기부금액은 전체 금액에서 35%(상위 1% 부유층)~50%(상위 1~5% 부유층)나 된다. 부자들의 기부금의 비중이 절대적인 수치를 점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국에서는 소득 상위 1~5%의 정확한 자선기금 출연 통계는 없으나, 관계자들은 “아마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부자가 적고, 기부금액도 선진국에 비해 낮을 것”이라고 말한다.

기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실은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 돈 많은 거액 기부자는 이견희 정몽구 이종환(삼영기업

회장) 이명박 안철수 등 몇 사람 되지 않으며, 대부분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건희 회장은 2008년 사재 8000억원을 사회공헌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 일가와 삼성 계열사가 설립한 장학재단 기금 4500억원, 이 회장의 막내 딸 윤형씨가 남긴 재산 3500억원을 출연한다는 것이었다. 아직 구체적인 진전 상황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난해 4월 삼성경제연구소에 ‘사회공헌연구실’을 만들어 실현방안을 찾고 있는중이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2006년 비자금 사건에서 특별사면되면서 7년 동안 사재 84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8월 순수 개인기부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5000억원을 ‘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현대차 정몽구 재단)’에 기탁했다. 저소득층 자녀 8만 명에게 사회적 계층 이동을 위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데 사용한다고 목표를 밝혔다.

정몽준 의원도 지난해 8월 범현대가 오너들과 함께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는데 사재 20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당시 BBK와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가 불거지자 재산의 사회환원을 발표하고, 취임 2년차인 2009년 8월에 331억원을 출연해 자신의 호를 딴 청계재단을 설립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지난해 10월15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안철수연구소 주식의 절반(당시는 1500억원 상당, 현재는 2500억 원대)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재벌가와 대선주자급 지도층의 기부행위는 우리사회에 기부문화 확산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정부가 예산으로 빈민을 구제하고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소액기부문화가 확산되어야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기부참여율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의 제고, 사회통합이라는 목표가 실현된다”고 말한다.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기부문화는 상류층, 사회지도층의 거액 출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일반 시민들의 기부 참여가 확산되어야 한다. 지금도 액수는 많지 않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낸 소액 기부금액이 모여 수 조원의 큰돈을 만들어 내고 있다.

기부참여율이 높아야 함에도 2007년 68.6%였던 개인 기부 참여율이 2009년엔 55%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국민 2명 중 1명이 기부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 등 선진국의 70~80%대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개인들이 참여하는 풀뿌리 기부가 확산돼야 따뜻한 사회, 함께 사는 사회가 실현되는 것이다. leeds@newsis.com

※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스 제260호(1월16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화가 정체되어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울화통이 터진다’라는 말을 사용한다. 장기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 고착되어 가고 있는 소득 양극화 등으로 불만과 불안,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자기들의 이야기, ‘아픔을 제발 들어 달라’고 했지만 별로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2040’들의 울화통이 터지고 난 뒤에야 여야 할 것 없이 소통을 위해 나섰다.

선거 당락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 이들과의 소통을 뼈저리게 느낀 정치권은 그들과 소통을 위해 SNS도 활용하고 북콘서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 소통을 하겠다고 난리들이다. 이유야 어쨌게 되었든, 무슨 목적이든 소통을 하고자 나선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소통이 무엇일까? 소통이 왜 필요할까?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와 소통을 해야 할까? 소통에 대한 이러한 질문들을 해 보게 된다.

올해 총선과 대선이라는 중대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소통을 위해 SNS 역량지수를 만들고 당장 4월 총선에 ‘SNS 활용 능력’을 공천에 반영한다고 한다. 예비후보들은 부랴부랴 뒤 늦게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팔로우와 친구를 늘리기 위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한편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소통을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현장을 가보고 현장의 사람들 목소리를 들어야 할 시간에 소통을 한답시고 스마트폰을 수시로 들여다보고 댓글을 다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 모습들이 달갑지만은 않다.

소통을 위해 정치인, 정치 지망생들이 SNS에 올린 글들을 보면 하나 같이 듣기보다 나의 생각, 나의 말을 여전히 많이 하고 있다. 어디에 갔고 무슨 행사에 참석했고 누구를 만났다는 이야기 등 신변잡기 같은 내용을 알리는 것이 주류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아직 소통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방법도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소통’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들어 주는 것’

몇 년 전 인기리에 방영이 되었던 한 드라마 대사가 생각난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손을 오

그라들게 한 이 말 한마디에 시청률이 경총 뛰었다. 김난도 서울대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작년 한해 베스트셀러 종합 1위 책이다.

이 둘은 SNS를 활용하지 않았지만, 너의 아픔에 내가 어떤 눈높이와 자세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내가 아닌 ‘너’ 또는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귀 기울려 진지하게 듣고 공감하고 있다. 비록 아픔을 직접 대신해 주지는 못하지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진정성이 서로에게 통한 것이 인기를 얻게 된 비결이라고 본다.

말, 즉 소통이 되지 않아 먹통이 되고 불통이 된 정치인, 정치권은 국민들, 유권자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고 외면을 당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개그의 소재가 되어 조소거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소통부재는 비단 정치인, 정치권의 문제만이 아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가진 자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기득권층은 그렇지 못한 계층에게 더욱 귀 기울려 많이 듣는다면 절로 가슴이 열려 말(言)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행동이 통해 자연히 배려와 양보로 소통이 이뤄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 ‘3소’를 잘해야 한다고 한다. ‘옳소’, ‘그렇소’, ‘맞소’ 이는 상대를 인정해 주고 상생을 하려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지금은 선거철이다 보니 유권자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그들이다.

그래서 다들 소통하겠다, 낮은 자세로 듣겠다고 난리들이겠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를 일이다. 부디 유권자 눈높이에서 듣고자 했던 초심의 자세를 잃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뉴시스아이즈

이슈진단 ‘경제민주화, 잠룡들의 여의주?’

—이준영 서울시립대 교수가 말하는 ‘경제민주화’

 NEWSis()

【서울=뉴시스】이득수 기자 =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연결지은 논문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저자는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이준영 교수. 이 교수는 학부(고려대)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했고, 석사와 박사학위는 사회정책학(독일 쾰른대학)으로 받아 경제정책과 복지 문제를 한데 아우르는 고찰을 심도있게 진행할 수 있었다는 평을 듣는다.

이 교수는 지난달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선진사회복지연구회가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사회복지와 경제정책의 관련성에 대해 “한 인간이 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거나 또는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충분한 소득을 획득하지 못하게 될 때 국가가 개입해 자원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로 재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경제민주화는 개인의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교수를 만나 경제민주화의 역사적 배경과 향후 지향해야 할 추진 방향 등을 들어봤다.

- 경제민주화는 역사적으로 19세기 말 영국의 ‘산업민주주의’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산업민주주의 및 경제민주화의 개념도 시대에 따라 변화돼 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민주화는 영국에서 산업화로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본가에 대한 힘을 강화해 노사문제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그 후 산업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노사관계의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본래의 문제인 생산수단의 사적인 소유를 제한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었다. 이 후 독일에서 산업민주화의 개념을 경제 전체에 확대 적용하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체계화됐고, 이는 노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상품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까지도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요즘 각 정당과 대선 후보마다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왜 이 시점에 경제민주화가 대두하게 됐는지, 이처럼 경제민주화가 대두된 배경엔 우리 사회에 문제가 내재돼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데 현 정권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친 기업적 정책을 표방하고 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실제로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를 유지 또는 확대하고 감세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로 경제가 활성화됐다면 경제민주화의 논의가 불필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동시에 불황을 맞게 됐고, 기대하던 경제 활성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단지 일부 대기업들과 금융기관들만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기록했고, 그에 비해 서민들의 생활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벌들의 높은 실적은 각종 특혜와 불공정거래를 묵인하고 그로 인해 중소기업, 영세상인 그리고 서민들의 희생과 고통으로 달성된 것이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이 높다. 따라서 공정한 분배를 위한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즉,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가 이뤄내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생산, 분배 그리고 소비 등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인정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노동시장, 상품시장, 금융(자본)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임금, 가격, 이자 그리고 임대료 등에 관한 것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해 단지 시장의 지배력에 의해 의사결정이 주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 경제민주화가 완성되기 위한 사회적 토대는 무엇이며, 경제민주화 완성을 위해 사회 각 주체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심판자로서 공정한 경기(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한다. 일반 대중이 현실적으로 경제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용이하진 않다. 시민단체 등에 소속돼 불매운동, 캠페인 등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모든 결정은 법과 정책에 의해 결정되며, 대중이 법과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투표라는 정치적 방식이 주가 된다. 따라서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여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 경제민주화와 국민 삶의 질의 상관관계는.

“경제의 비민주성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적 메커니즘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절대 빈곤층 문제는 성장 제일주의의 결과다. 경제민주화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재벌기업의 횡포나 소득의 불균형 등 분배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국민 삶의 질을 다양한 참여 방식을 통해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 이 교수는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경제적 현상을 지적했다.

자유시장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완전경쟁이 이뤄진다’는 이론은 결과적으로는 허구이며, 최종적으로는 최강의 경쟁력을 갖춘 자가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독점 기업은 독점체제를 지속하기 위해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경제민주화는 모든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기본으로 하지만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은 결국 독점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우수한 상품을 값싸게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이 다른 모든 기업들을 시장에서 몰아내게 되는 것이 바로 자유경쟁이 기대하는 바일 것이다. 국민경제의 입장에서든 자원이 항상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곳에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정태적인 관찰일 뿐이다. 동태적인 관점에서 진정한 의미로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생산방식을 발견한 새로운 도전자에 의해 기존의 독점이 파괴

될 때 가능하다. 과연 시장경제 스스로 이러한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한번 독점하게 되는 기업은 그 지위를 잃지 않으려고 시장 지배력을 활용 또는 남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기업들만 있다면 경제민주화는 필요가 없게 된다. 결국 시장경제 스스로는 자유로운 공정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자유를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개입과 규제는 불가피하다.”

경제주체들 간에 공정한 게임이 진행되기 위해선 심판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페어(Fair)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묻혀버린다. 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경찰도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 비로소 수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leeds@newsis.com

NEWSDAILY 선진사회복지연구회 "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 해야...



윤희성 기자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자원 확보 방안을 살피고자 25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자원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이 발표를 맡았다.

신영석 부원장은 현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문제점으로 '부과체계의 이원화'를 지적했다. 건강보험은 2002년 재정통합으로 단일보험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부과체계는 여전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 되어 있는 상태. 신영석 부원장은 통합된 보험료부과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는 이준우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김동섭 조선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윤철수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등이 참가했다.

소득 차이 10배, 보험료 차이는 3.5배

한국보험신문

직장가입자 부담능력 등까지 확장해야

건강보험이 2002년 재정통합을 끝으로 단일보험체제로 변경됐지만 부과체계의 문제점 때문에 형평성이 결여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열린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세미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간 부과요소, 지역간 자격, 지역간 소득 산정 기준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납입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원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비례적으로 증가하지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원수와 무관하게 부담하는 불공평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은 일반 근로자와 거의 다르나 특수형태의 자영업자로서 사업소득에 준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는 역진성을 가지고 있다. 600만원 과세소득자의 소득 등급별 점수는 380점, 6000만원의 소득자의 점수는 1336점으로 소득이 10배가 증가했는데도 점수는 불과 3.5배 증가에 그치고 있다”면서 “소득체계에 따른 보험료 부과에 형평성이 여전히 결여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지역보험료의 부과체계는 과세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복층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산정절차도 복잡하며 부과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각 부과요소별로 산정된 종합점수를 다시 부과표준소득점수표에 적용시켜 최종보험료를 산정함으로써 개인별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어 세대원의 전출입에 따른 보험료 변동 등에 관한 민원에 대해 국민을 이해시키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 연구원은 “전 국민적 차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장소득자와 지역소득자의 구분이 없는 통합된 보험료부과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원은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직장가입자의 부담능력을 현행 임금소득에서 금융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 기타 다른 소득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역가입자는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게 2중으로 사용됐던 재산을 한번만 사용하되 부과요소로 계속 활용하고 자동차는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적절치 않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류현승 기자

Yakup.com

최재경 기자 | cjk0304@yakup.com 입력 2012-10-25 15:01

최종수정 2012-10-25 16:07 **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25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선진사회복지연구회가 주최하는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현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문제점으로 '부과체계의 이원화'를 지적했다.

건강보험은 2002년 재정통합으로 단일보험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부과체계는 여전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 되어있다. 이에 지역간 이동시 보험료 차이가 크고 실직에 의해 소득 감소에도 재산 등의 이유로 보험료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 직장가입자격 취득대상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고소득 전문직종의 사업자가 직장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산 보험료를 회피할 수 있고, 지역가입자 내에서도 과세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 기준이 달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원수와 무관하게 부담하는 불공평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은 일반 근로자와 거의 다르없으나 특수형태의 자영자로서 사업소득에 준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에게는 역진적 부과구조로 설계되어 600만원 과세소득자의 소득 등급별 점수가 380점이나 6,000만원의 소득자의 점수는 1,336점으로 소득은 10배가 증가하였으나 점수는 불과 3.5배 증가에 그치고 있다.

유사하게 재산의 경우도 1,000만원 재산 보유자의 점수는 66점이나 1억 보유자의 점수는 439점으로 재산이 10배 증가해도 점수는 6.6배 증가에 그치고 있다.

부과체계도 복잡해 지역보험료의 부과체계는 과세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복층구조로 이루어

져 있고 산정절차도 복잡하며 부과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또 각 부과요소별로 산정된 종합점수를 다시 부과표준소득점수표에 적용시켜 최종보험료를 산정함으로써 개인별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세대원의 전출·입에 따른 보험료 변동 등에 관한 민원에 대해 국민을 이해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신 부원장은 전 국민적 차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장소득자와 지역소득자의 구분이 없는 통합된 보험료부과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계별로 진행해 1단계(단기)에서는 현행 부과체계 문제점 중 일부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되 최종 부과체계를 감안하여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2단계(중장기) 부과체계에서는 전 국민 대상 단일부과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제안했다.

부과요소는 단기적으로는 직장가입자의 부담능력을 현행 임금소득에서 금융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 기타 다른 소득까지 확장하고, 지역가입자는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게 2중으로 사용되었던 재산을 한 번만 사용하되 부과요소로 계속 활용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동차는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적절치 않으므로 제외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성과 연령을 기본보험료 형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중장기로는 단일 부과체계적용을 위해 소득기준의 부과체계와 소득외 기본 보험료 등 기타요소의 도입여부를 검토하도록 제안했다.

이에 보험료 재원 확보를 위해 재원확보 다양화 방안을 강구, 건강보험재정을 소득세 성격의 보험료에 의존하는 대신 정부의 지원금인 국고지원의 비중을 상향 조정해 조세수입을 각 세원에 분산할 경우 각 세원에 대한 세율이 낮아져 후생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부원장은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지금보다 조세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조세의 비중을 확대하면 지금보다 고연령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저연령층의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건강보험에 국고지원 확대해야”

 **NEWSis** | 기사입력 2012-10-25 18:33

【서울=뉴스is】한정선 기자 = 건강보험 지출 규모가 나날이 확대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의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주제로 마련한 세미나에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지난 2010년 33.9조원에서 오는 2020년에는 87.4조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제성장률 둔화로 임금을 바탕으로 한 보험료 수입 확대가 어려운 만큼 정부의 국고 지원 비중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신 부원장은 합리적인 건강 보험료 부과를 위해 직장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현재처럼 임금소득만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금융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대상에서 형제 자매를 제외함으로써 무임승차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부원장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자동차를 생계유지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면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 보유 여부를 보험료 부과 요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jsh@newsis.com



선진사회복지연구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25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등이 토론을 벌인다.

자세한 문의는 연구회(070-8793-5202)로 하면 된다. 박영신 기자



"건보, 사회보장화...보험료 치중 탈피, 변화 필요"

부과체계 개편 공감..."지출 측면 관리 동시 담보돼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향 및 재원확보 방안 토론회]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높아지면서 건강보험이 보험을 넘어 사회보장의 성격으로 진화하고 있음에 따라 부과체계 개편과 재원비중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로 오늘(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향 및 재원확보 방안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과 조세비중 증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그 과정과 방법에는 다른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준우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은 피부양자 자격조건 강화와 지역 자동차 보험료 제외 등 단계적 적용에 찬성했다.

반면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은 부과체계 단일화 시 직장가입자에 상대적 역차별이 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국장은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과연 공정한 개편이 이뤄질 수 있을 만큼 사회적 준비가 돼 있는지 묻고 싶다"며 "'유리지갑'인 직장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패널들은 안정적 건보재원 운용을 위해 건보료 비중보다 소비세 등 조세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재원 확보 논의와 함께 강력한 지출관리가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준우 교수는 "지출 측면의 개혁을 위해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의료장비와 병상 과잉공급 규제와 약제비 절감, 총액계약제 도입과 지역별 병상총량제, 주치의제도, 입원 수가 DRG 등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또한 "지속가능한 재원 운용을 위해 건강증진 프로그램 마일리지 도입 등 지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선희 국장은 더 나아가 사회보장목적세 도입을 제안했다. 노인인구 증가 등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강보험이 사회보장화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세 재원 확충 차원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김 국장은 "조세는 기여여부에 따라 급여 혜택 자격이 부여되는 보험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체납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부담금 대상자는 대기업과 계약사, 보험사 등으로 설정 하되 아동과 임산부, 노인 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별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 후원계좌

611-020289-871(외환) 예금주: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이정숙

*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 과제’(2011.2.18),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6.29) 토론회를 MBC뉴스 토론회 풀영상 이나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저희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구성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silent@hanmail.net 070-8793-5202